

발간등록번호

71-6412519-000002-01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경기북부

안전한 경기북부,  
자치경찰이 함께 합니다.

# 우리 동네 자치 경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NORTHERN GYEONGGI-DO POLICE COMMISSION

# 자치경찰, 새로운 시작

2021년 7월 1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난 2년 간 추진한 **우리동네 자치경찰** 활동을  
이 백서에 담는다.



### “ 안전한 경기북부, 자치경찰이 함께 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벌써 2주년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취지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2년 전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자치경찰제는 온전하게 분리되지 못하였고 국가경찰이라는 큰 골격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위원회에 제한된 인사권, 지휘권 등을 인정하는 반쪽짜리 자치경찰제가 출범하였습니다.

인적·물적·제도적으로 모든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경기북부’를 비전으로, 경기북부경찰청과 13개 경찰서 1,000여명의 자치경찰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 축사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간 경기북부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애써주신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신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자치, 교육자치에 이어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지역사회 제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생치안 서비스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방역 활동을 시작으로,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가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환경개선’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치안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아직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나아가기에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성공적인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道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을 축하드리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경기도지사 **김 동 연**

## 축사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백서 「우리동네 자치경찰」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질서가 송두리째 바뀌는 시대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혀 새로운 사회, 문화, 질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우리의 지방자치 역시 새로운 전기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역사 76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전기를 시작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이루는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현실 속에서 갈피를 잡아야 하는 일로 한순간도 허투를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번 백서는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길을 가며 만들어낸 지난 2년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써주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신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해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 출범한 이후 도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 자치경찰사무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찰업무에 반영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정책을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해오며 자치경찰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백서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자치경찰 제도·정책 홍보, 도민 소통을 비롯해 범죄예방, 생활안전 정책과 치안 인프라 구축,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소통 개선, 자치경찰 직무 역량 강화 등 그간의 다양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제도의 안정적이고 바른 정착과 더 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난 2년의 발자취와 그간의 성과가 가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떠받치는 한 축으로서 자치경찰이 가야 할 방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백서 「우리동네 자치경찰」의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경기도의회는 1,4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6월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 축사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을 7천여 경기북부경찰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간 위원회와 우리 경찰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늦게 출범하였고, ‘1개 도, 2개 위원회’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시도보다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위기대응팀·주치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집중개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견고한 공동체 안전망을 확충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환경설계 개념을 도입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시·군 단위 행복마을 관리소-경찰서 간 치안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은 국가경찰 중심의 하향식 치안서비스가 주민의 의견에 초점을 둔 상향식 치안서비스 체계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북부경찰은 더욱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주민중심 경찰활동’을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도의 우수한 인프라와 경기북부경찰의 치안전문성을 결합하여 그간 추진해온 시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치안현장의 곳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법적 근거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치안파트너로 거듭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에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치안 공동생산자로서 주민의 역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최대 자치 복지포인트 지급, 업무차량 지원 등 현장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경기북부 자치경찰제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이 책자가 ‘주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살기 좋은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6월

경기북부경찰청장 **이문수**

## 발간 소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 벌써 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위원회가 경기북부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이후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하면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치안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2년 간의 노력의 결과물을 백서에 담아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위원회의 발전된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 정용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 안전을 지역맞춤형으로 실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국가경찰과 독립된 자치경찰 조직운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특별회계 운영과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으로 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하여 주민중심 최고의 자치경찰제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1년 도민들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두연

## 발간 소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와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장을 받고 첫번째 회의를 한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착과 도민의 편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전한 경기북부, 자치경찰이 함께합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큰 글씨의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가 안전한 경기북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백서’를 발간합니다. 백서는 돌아보는 것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력하나마 그 길에 함께하고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위원회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박선영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두 해가 지났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면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자치경찰 위원회가 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아직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점차 도민 친화적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자치경찰이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사무의 명확한 분리뿐만 아니라 인사, 조직,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이원화된 모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도민들의 주민 체감형 자치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혜택은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 소순창

## 발간 소감



돌이켜 보니 어느덧 우리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2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육기관에 평생을 몸담으며 체득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되살리기 위해 나름 바쁘게 활동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백서 발간을 통해 그동안 전개해 왔던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좋은 기회로 승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의 외연과 내실을 함께 키우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 현 숙**



2021. 7. 1.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이후, 과거 국가경찰 중심의 수직적 치안활동이 우리 경기북부 지역실정에 맞는 수평적 치안활동으로 변모하는 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치안서비스 소비자로서 도민들의 참여 활성화, 체감 치안의 강화 등 명실상부 도민이 주체 및 주인이 되는 경찰행정으로의 변화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새로 출범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매김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기관 관계자분들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소중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최 성 진**

# Contents

## 발간사 및 축사

발간사 및 축사	2
----------	---

## Section 1

### 자치경찰제 도입

1. 개요	14
2. 추진경과	16
3. 주요내용	19

## Section 2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 위원회 개요	22
2. 사무국 구성	25
3. 자치법규 제·개정	27
4. 자치경찰제 홍보	29

## Section 3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운영	36
2. 실무협의회 운영	46
3. 정책자문단 활용	52
4. 도민 의견수렴	55

## Section 4

### 주요정책

1. 현장중심 치안활동 강화	
1.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60
2.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64
3.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 구축	66
4. 자치경찰 전용차량 지원	68

<b>2. 사회적 약자 보호</b>	
1.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70
2. 스톱킹 STOP!! 지능형 홈CCTV 구축	72
3. 어린이폴리스 운영	74
<b>3.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b>	
1.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 개선	76
2. 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교통환경 개선	80
3.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추진	86
<b>4. 감사평가 및 청렴인권</b>	
1. 자치경찰사무 감사	88
2.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90
3. 인권 보호 및 자치경찰 청렴도 향상	92
<b>5. 인사 및 교육</b>	
1. 임용권 행사	93
2. 교육 및 포상	100
<b>6. 사기진작</b>	
1.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복지포인트 지원	104
2.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106

## Section 5

### 역량강화 및 소통협력

1. 워크숍 개최	110
2. 정책연구 추진	112
3. 간담회 및 현장방문	114
4.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118
5.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원탁회의	121

### 부록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	126
2.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40
3. 경기북부경찰청 조직 및 현황	152
4. 위원회가 걸어온 길	155

# 01

---

## Section 1

### 자치경찰제 도입

1. 개요
2. 추진경과
3. 주요내용

## Section 1. 자치경찰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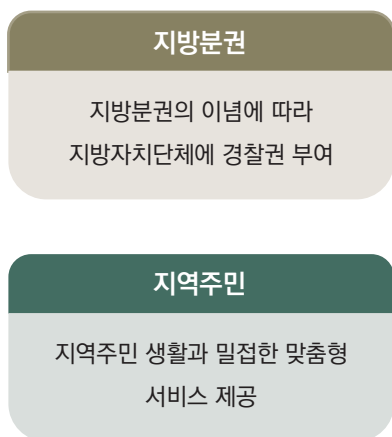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 치안 서비스 제공

#### 1. 개요

**자치경찰제**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 서비스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이는 거대한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분산하고 기능적으로 배분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국가경찰의 지방분권화,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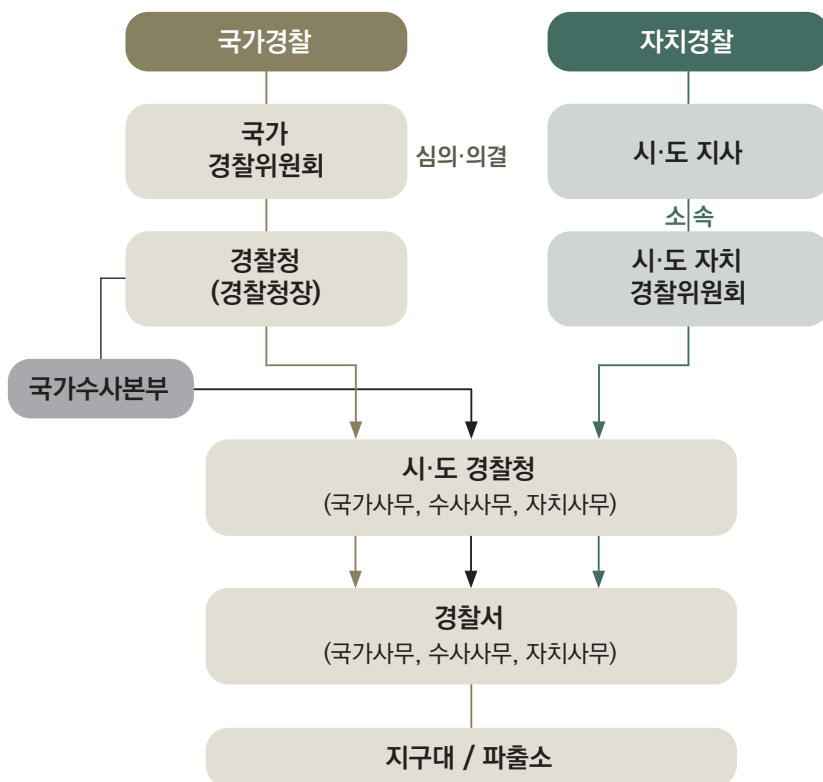
자치경찰 제도는 해당 지역의 치안 사무를 국가경찰이 아닌 그 지역의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치안 서비스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히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적 치안 역량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치안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021.7.1.)



현 자치경찰제도의 지휘·감독 체계는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 등 삼원적 체계로 나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구조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지휘·감독한다. 다만,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 경찰청장의 보충적 지원·조정이 가능하다.

자치경찰 지휘·감독 체계



현 제도는 일원화 모델로 기존의 경찰 조직을 유지하여 별도의 조직 신설이나 경찰 인력의 이관 없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고, 기존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 사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체계이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모두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기존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사무 처리를 위해서 각 시도별로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국장) 각 1명, 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획일화된 서비스가 아닌 지역맞춤형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치안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돼 행정서비스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이 활성화되어 주민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제도 시행으로 중앙집권화된 경찰력을 분산해 민주성을 높일 수 있고 전문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 위원회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도출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지역주민과 치안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2. 추진경과

**일원화 자치경찰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달 3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이후 2021년 3월 2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가능) 공포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21년 4월 29일 자치경찰 道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여 5월 20일 공포되었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조직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

### 자치경찰제 법안 주요내용

#### ■ (사무구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 (국가경찰사무) 치안유지, 범죄수사 등 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
- (자치경찰사무)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일부 수사
-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

#### ■ (조 직)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국가경찰 조직) 경찰청, (자치경찰 조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 경찰사무의 지역적 부담기관 : 시·도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파출소

- (지휘·감독)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 각 삼원적 지휘체계
  - (국가경찰사무)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 지휘·감독
  -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위가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 지휘·감독
  - (수사사무) 국수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휘·감독
- (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별도 사무기구 설치
  - (구 성) 위원장, 상임위원1명 포함 7명
  - (추천·지명권) 시·도지사(1), 의회(2), 국가경찰위원회(1) 추천위원회\*(2), 교육감(1)
    - \* 추천위 구성 :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 1, 시·군·구의장단 협의체 1, 경찰청장 1, 지방법원장 1, 시·도 기획조정실장
  - (사 무) 자치경찰사무 관련 목표수립 및 평가, 감사, 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등
- (신분·인사) 경찰공무원은 국가직, 現 계급 유지
  - 경찰청장의 자치경찰사무 경찰관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 (재정지원)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인력·장비 등 소요비용 국가지원
- (예 산) 자치경찰위 심의·의결(경찰청장 의견청취) 거쳐 시도지사 수립
  - ※ 자치경찰사무 추진 시 도비 투입 가능, 시·도의회의 자치경찰위원장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 규정
- (시행일 및 시범운영) 시행일('21. 1. 1.), 시범운영 가능('21.6.30. 까지), 전면시행('21. 7. 1.)
  - ※ 시·도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시범운영 실시

## 자치경찰제 추진 연혁

1990년대 이전까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논의가 되었으나 계속 무산되었다.

- ▶ 1948. 7월 정부조직법 제정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자치화를 논의하였으나 국립 경찰 형태로 결정
- ▶ 1987년 민주화 운동 후 경찰조직에 대한 개혁안이 부상되면서 자치경찰제 논의가 있었으나 3당 통합으로 논의 소멸

## ■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93년~'98년	문민정부	'91년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 고조. '96년 경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경감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회기종료로 폐기
'98년~'03년	국민의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당정협의 등을 진행하여 '99년 일본식 자치경찰제를 참고한 경찰위원회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폐기
'03년~'08년	참여 정부	'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행안부 소속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설치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회기종료로 폐기  '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제주자치경찰제 시행
'08년~'13년	이명박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을 19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통보('12.9월)하고, 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거쳐 자치경찰제 실시방안을 마련('13.1월)하였으나 국회제출은 못함
'13년~'17년	박근혜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분권 강화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추진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실무안을 마련하였으나,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여 법률안으로 발의되지는 못함
'17년~'22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선정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과도한 재정 소요 및 사무 혼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일원화 체제로 출범
'22년 ~ 현재	윤석열 정부	(자치경찰권 강화)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도 소속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권과 인사권 행사, 기초지자체 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실시 검토【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22.4.27.】  자치경찰 이원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중요사안으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한 자치경찰권 강화 의지 표명  * (지방분권 확대) 세종·강원·제주·전북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시범 실시 후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26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방안 검토(행안부, '23.6월 현재)

### 3. 주요내용

**자치경찰사무**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사무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업무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생활안전은 지역순찰, 범죄예방, 안전사고,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사회적 약자 보호는 아동,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등을 관장하며, 교통안전은 교통법규 위반, 교통안전 시설 등의 심의·설치·관리, 혼잡교통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 자치경찰사무(경찰법 제4조) 주요 내용

##### 생활 안전

- 생활안정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및 지도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 지원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업무

##### 지역 교통

-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등
-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 지역 경비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 수사


- 공연음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소년 범죄
-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범죄
-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02

---

## Section 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1. 위원회 개요
  2. 사무국 구성
  3. 자치법규 제·개정
  4. 자치경찰제 홍보

## Section 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경기북부

#### 1. 위원회 개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1년 7월 1일 출범한 경기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도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활동 분야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며,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부와 북부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도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 교육감 추천 1명, 위원추천 위원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등 총 7명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자치경찰위원회	도의회	국가경찰위	도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	도지사
	추천				지명
인원(7)	2명	1명	1명	2명	1명
↑					
*위원추천 위원회(5)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시·군·구청장 협의체	지방법원장	경찰청장	균형발전 기획실장
	1명	1명	1명	1명	1명

위원장은 신현기 위원(現 한세대학교 교수), 상임위원은 정용환 위원(前 KOICA 자문관, 사무국장 겸임)이 임명되었으며, 비상임위원으로서 김두연 위원(現 (주)이도 상무이사), 최성진 위원(現 법무법인 통일 대표변호사), 소순창 위원(現 건국대학교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박선영 위원(現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숙 위원(前 경기도 교육연수원장)이 각각 임명되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2021.6.30.)



▲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2021.6.30.)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출범 이후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계획’,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시설 개선 계획(안)’ 등 총 127건(’21년 48건, ’22년 51건, ’23년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경기북부 치안 수요에 맞는 사업발굴 및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회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개최 현황

2023.6.30. 현재

구 분	회의개최			상정안건		
	계	정기	임시	계	의결	보고
계	64	24	40	233	127	106
2021년	18	6	12	81	48	33
2022년	31	12	19	102	51	51
2023년	15	6	9	50	2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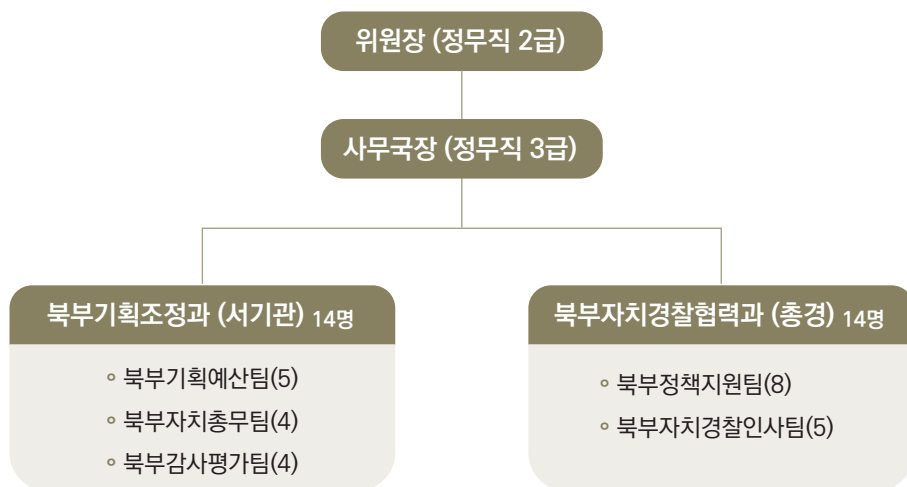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사 진	주 요 경 력
위원장	신현기(男)		·現)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現)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회장
상임위원 (사무국장)	정용환(男)		·前) KOICA 자문관 ·前) 용인서부경찰서장
위원	김두연(男)		·現) 주식회사 이도 상무이사 ·前) 서울영등포경찰서장
위원	박선영(女)		·現)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現)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위원	소순창(男)		·現) 건국대학교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前)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위원	이현숙(女)		·前) 경기도 교육연수원장 ·前)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위원	최성진(男)		·現) 법무법인 통일 대표변호사 ·前) 경기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 2. 사무국 구성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1국 2개과 5개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북부기획조정과는 북부기획예산팀, 북부자치총무팀, 북부감사평가팀 등 3개 팀으로,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북부정책지원팀, 북부자치경찰인사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 사무국장, 道 일반직공무원 20명, 경찰청 경찰공무원 8명 등 총 30명이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북부기획조정과 사무는 (북부기획예산팀) 자치경찰사무 목표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 (북부자치총무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등, (북부감사평가팀)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주요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업무는 (북부정책지원팀) 자치경찰사무 관련 민간단체와 자치경찰의 협력 지원,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대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분야 정책 지원·관리 등, (북부자치경찰인사팀) 자치경찰사무 인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 자치경찰 인사관리(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등이다.

## 부서별 주요 기능

### 북부기획 조정과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및 정책 수립
-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통합 및 조정
-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운영(위원추천위원회 포함)
-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후생복지(사기진작) 업무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
-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정책 수립 및 개선

### 북부자치 경찰협력과

- 국가·자치경찰사무 등 협력 및 조정
-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대응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분야 정책 지원·관리
- 자치경찰사무 인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
- 자치경찰 인사관리(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 3. 자치법규 제·개정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법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출범 후 위원회 내부 업무 및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필요한 규칙을 제·개정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청 규칙(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규칙 등)이 폐지됨에 따라 각 도 경찰청에서는 관련 규정들을 새로 제정해야 했다. 해당 규칙들이 일선 실무 부서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고, 해당 규칙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등을 바탕으로 도 경찰청에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여, 도 경찰청에서 제정한 규칙들을 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의결을 거쳐, 위원회 소관 규칙 7건, 경기북부경찰청 소관 규칙 6건 등 총 13건을 제·개정하였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규칙 7건

연번	규칙명	주요 내용	소관부서	제·개정일
1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법제사무 처리규정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북부기획조정과	'21.8.12.
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북부기획조정과	'22.2.24. (일부개정)
3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 위임 등 경기도북부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규정	북부자치경찰협력과	'21.9.30.
4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북부기획조정과	'23.6.9. (일부개정)
5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정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 등 기준과 시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북부기획조정과	'21.9.30.
6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포상 규정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북부자치경찰협력과	'21.9.30.
7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지침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임용권의 행사와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북부자치경찰협력과	'23.4.10.

## 경기북부경찰청 소관 규칙 6건

번호	규칙명	주요 내용	소관부서	제·개정일
1	경기도북부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여성청소년과	'21.8.26.
2	경기도북부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 규칙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생활안전과	'21.8.26.
3	경기도북부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선도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여성청소년과	'21.8.26.
4	경기도북부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범죄나 사고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행하는 범죄예방진단의 절차와 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생활안전과	'21.8.26.
5	경기도북부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정리	교통과	'21.10.28.
6	경기도북부경찰청 경찰업무 위임사항에 관한 규칙	도 경찰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경찰서장에게 위임 처리케 함으로서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교통과	'21.12.23. (개정)

## 4. 자치경찰제 홍보

**자치경찰 홍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홍보하고 도민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정책 및 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도민들과 공유하였다. 특히, ‘열린소통방(자치경찰에 바란다 등)’ 메뉴를 통해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분야에 대한 도민의 시책건의, 제도개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과 도민 친화적, 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의 특성을 살린 BI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민 홍보를 전개하였다. 그 밖에도 리플릿,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G버스, 아파트 미디어보드, 도내 전광판, 버스 등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와 매체를 활용해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수용성 제고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 자치경찰제 홍보



▲ 홍보 BI 개발



▲ 버스 랩핑 광고



▲ 리플릿 제작 배포

전 직원이 참여하여 ‘안전한 경기북부, 자치경찰이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선정하여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경기북부’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직원을 대상으로 표어를 공모해 ‘안전해요! 우리동네, 함께해요! 자치경찰’, ‘우리동네 안전맞춤 자치경찰제’를 선정하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이 함께 디자인을 확정하여, 스티커를 제작하고 112순찰차에 부착 후 운행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치안 서비스 홍보를 위한 카드 뉴스, 영상 제작, 인터넷(유튜브 등), 옥외매체(대중교통 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제를 홍보하였다.

## 자치경찰제 홍보



▲ 홍보 동영상



▲ 순찰차 활용 홍보



▲ 홍보 배너 및 포스터 배포

그 외 위원회 공식 캐릭터 ‘두리두리’를 제작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바이럴 홍보도 추진하였다. ‘두리두리’는 경기도의 상징인 비둘기를 의인화하여 친근하게 표현한 독특한 외형으로 자치경찰이 도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근함과 포근함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였다. 캐릭터 ‘두리두리’를 활용한 홍보기획으로 도민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티커 등을 제작하는 등 위원회 각종 홍보물에 ‘두리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민밀착형 홍보를 위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통장협의회·주민자치협의회 등 분야별

단체 및 협의회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자치경찰’ 시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시·군 각 단체별 정례회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달라진 점 및 위원회 역할, 행정-치안 연계 방안 등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자치경찰제 홍보



▲ 두리두리 캐릭터



▲ ‘우리동네 자치경찰’ 시군 설명회

또한, 자치경찰이 출범했음에도 도민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홍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를 구성하였다. 공개모집을 통해 북부 소재 대학생(경찰학과 등) 28명으로 구성된 제1기 자치경찰 홍보 서포터즈(‘22.6.2. ~ 12.31.)는 온·오프라인 홍보, 학술 활동 참여 및 지원, 안전한 경기북부를 위한 현장 치안활동 참여 및 지원 등의 활동을 하였다. 위원회는 경기북부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위해 경동대, 신한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올해에는 도내 대학생 위주의 현장중심 서포터즈 51명, 지역 구분 없는 오프라인 SNS 홍보단 49명 등 100명으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제2기(‘23.4.13. ~ 12.31.)를 확대 운영해 오고 있다. 청년 서포터즈는 효율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온-오프라인 두 트랙으로 추진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청년 인지도 향상 및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교별 행사 참여, 거리 캠페인 등 자발적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자치경찰 토론회 참여, 정책 제안 등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수요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지역 치안활동 참여를 통해 자치경찰제 발전과 도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경민대, 대진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렇듯 위원회는 지역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치안활동, 자치경찰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 청년 서포터즈 업무협약식



▲ 청년 서포터즈 제1기 성과보고회



▲ 청년 서포터즈 제2기 발대식



▲ 지역대학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



##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 ■ 추진배경

- 청년, 대학생들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강화로 젊은 세대의 자치경찰 인지도 상승
  - 서포터즈 확대 운영으로 실질적 홍보 효과와 자치경찰제 인지도 제고('22년 28명 → '23년 100명)

### ■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1기(28명)

- (청년 서포터즈) 경기 북부지역 소재 대학생 28명\*
  - \* 경동대(12명), 신한대(15명), 대진대(1명)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선발위원 심사

#### 모 집 개 요

- ▶ 모집기간 : 2022. 4. 8.(금) ~ 4. 21.(목) / 14일간
- ▶ 모집대상 : 청년 서포터즈 30명
- ▶ 모집방법 : 경기도의 소리 / 경기도통합공모(gg.go.kr/gongmo) 게시

### ■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2기(100명)

- (대학생 서포터즈) 경기 북부지역 소재 대학생 51명\*
  - \* 경동대(16명), 신한대(28명), 대진대(6명), 경기대(1명)
- (SNS 홍보단) 홍보에 관심있는 청년 49명\*(지역제한 없음)
  - \* 경동대(28명), 신한대(14명), 경운대, 동의대, 명지대, 아주대, 전북대(각 1명), 일반(2명)
- 선발방법 : 서류 및 자격 요건 심사

#### 모 집 개 요

- ▶ 모집기간 : 2023. 3. 14.(화) ~ 3. 27.(월) / 14일간
- ▶ 모집대상 : 청년 서포터즈 100명(대학생 서포터즈, SNS 홍보단)
- ▶ 모집방법 : 경기도의 소리 / 경기도통합공모(gg.go.kr/gongmo) 게시

### ■ 주요활동 및 인센티브


- (대학생 서포터즈)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캠페인, 치안현장 견학, 정책 아이디어 제안, 토론회 등
- (SNS 홍보단) 자치경찰 관련 홍보 콘텐츠 직접 제작 및 온라인 홍보
  - ↳ 도지사 및 위원회 표창, 활동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 부여

# 03

---

## Section 3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1. 위원회 운영
  2. 실무협의회 운영
  3. 정책자문단 활용
  4. 도민 의견수렴

## Section 3.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도민결으로 다가가다

#### 1. 위원회 운영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출범 이후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 관련 여러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2021년은 <2021년 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등 심의의결 48건,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보고> 등 보고 33건으로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2022년은 <2022년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포상 업무계획(안)> 등 심의의결 51건,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부 계장급 전보인사 보고> 등 보고 51건으로 총 10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은 6월 현재 <2023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등 28건 심의의결,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결과(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환경개선(TAPTED))> 등 보고 22건으로 총 5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개최 현황

2023.6.30. 현재

구 분	회의개최			상정안건		
	계	정기	임시	계	의결	보고
계	64	24	40	233	127	106
2021년	18	6	12	81	48	33
2022년	31	12	19	102	51	51
2023년	15	6	9	50	28	22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개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 ■ (2021년) 총 81건 (심의·의결 48건, 보고 33건)

#### • (심의·의결) 48건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심의결과
1	제1회	07.01	정기회의	위원회실	2021년 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원안의결
2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의 한시적 위임의 건	원안의결
3	제2회	07.07	임시회의	위원회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의 건	원안의결
4	제3회	07.09	임시회의	위원회실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임용추천 협의의 건	원안의결
5	제4회	07.13	임시회의	위원회실	경찰청장의 유형시설 등 특별단속에 대한 협조의 건	원안의결
6	제5회	07.21	임시회의	영상회의	관계기관 합동 유형시설 밀집지역 점검계획에 관한 건	원안의결
7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슬로건 선정의 건	수정의결
8	제6회	08.12	임시회의	위원회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2년 본예산 편성계획(안)	원안의결
9					2021년 하반기 자치경찰사무 감사 기본계획	원안의결
10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법제사무 처리규정(안)	수정의결
11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원안의결
12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시행 준비 지휘에 관한 건	원안의결
13					보호종료아동 보호 · 지원에 관한 건	원안의결
14	제7회	08.26	정기회의	위원회실	경기도북부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안)	원안의결
15					경기도북부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규칙(안)	원안의결
16					경기도북부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안)	원안의결
17					경기도북부경찰청 소년업무규칙(안)	원안의결
18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안)	원안의결
19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지휘 · 감독권 위임규정(안)	심의보류
20					위원회 자체시책 '위기가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계획	원안의결
2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계획(안)	원안의결
22					지구대(파출소)장 보직 사전의견 제시 운영계획(안)	원안의결
23					2021.9.1.字 근속승진 대상자 임용	원안의결
24	제8회	09.10	임시회의	위원회실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행사계획(안)	수정의결
25	제9회	09.23	임시회의	영상회의	남양주북부경찰서 진건 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원안의결
26	제10회	09.30	정기회의	위원회실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시설 개선계획(안)	원안의결
27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규정(안)	원안의결
28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정(안)	원안의결
29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 위임규정(안)	원안의결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심의결과
30	제10회	09.30	정기회의	위원회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포상규정(안)	수정의결
31					2021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업무계획(안)	수정의결
32	제11회	10.14	임시회의	위원회실	2021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 평가계획(안)	원안의결
33	제12회	10.28	정기회의	위원회실	경기도북부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정(안)	원안의결
34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구성(안)	원안의결
35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계획(안)	원안의결
36					2021년 하반기 부패방지·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안)	원안의결
37					2021년 하반기 인권보호 추진계획(안)	원안의결
38					2021.10.31.후 심사·시험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원안의결
39	제13회	11.11	임시회의	위원회실	2021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 평가결과	원안의결
40	제14회	11.17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1.11.23일자 심사·시험승진후보자 승진임용	원안의결
41	제15회	11.24	정기회의	영상회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원안의결
42					2021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정기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원안의결
43	제16회	12.08	임시회의	영상회의	하반기 퇴직 관련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원안의결
44	제17회	12.23	정기회의	위원회실	경기도북부경찰청 경찰업무 위임사항에 관한 규칙 개정	원안의결
45					2021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정기 특별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원안의결
46					하반기 퇴직 관련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원안의결
47	제18회	12.29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심사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원안의결
48					자치사무 경찰관 승진후보 대상자 승진임용	원안의결

#### •(보고) 33건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1	제1회	07.01	정기회의	위원회실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보고
2					사무국 업무보고
3	제2회	07.07	임시회의	위원회실	경기북부경찰청 업무보고
4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 발굴 보고
5	제6회	08.12	임시회의	위원회실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행결과
6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계획
7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등 인사운용 계획(안) 보고
8					도-경 합동 유흥시설 밀집지역 총력점검 결과보고
9	제7회	08.26	정기회의	위원회실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불편 도로시설 개선계획 추진
10					권역별 주취자 응급의료 센터 신설 추진계획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11	제7회	08.26	정기회의	위원회실	정신질환자 야간·공휴일 응급입원 가능 공공병상 추가확보
12	제8회	09.10	임시회의	위원회실	2021년 추석 명절 종합치안계획
1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대비 교통관리계획 보고
14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시설 개선계획
15	제10회	09.30	정기회의	위원회실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관련 위원회 의견 검토결과
16					소년업무규칙 관련 위원회 의견 검토결과
17					아동안전지킴이 규칙 관련 위원회 의견 검토결과
18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19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민 여론조사 결과
20	제11회	10.14	임시회의	위원회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구성(안)
21	제12회	10.28	정기회의	위원회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본예산(안)
2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23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수여 현황('21년 10월)
24	제15회	11.24	정기회의	영상회의	고위험 학대우려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획(하반기)
25					여청기능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운영 현황
26					2021년 하반기 고양·포천·가평경찰서 종합감사 결과보고
27	제17회	12.23	정기회의	위원회실	2022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일정(안)
28					스마트워치 신고 대응체계 개선 추진사항
29					2021년 경기북부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
3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대비 진행상황 보고
31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결과보고
32	제18회	12.29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1년 경기북부경찰청 종합감사 자치경찰사무 감사 결과보고
33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브랜드(BI) 용역 완료보고

## ■ (2022년) 총 102건 (심의·의결 51건, 보고 51건)

### • (심의·의결) 51건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심의결과
1	제21회	01.27	정기회의	영상회의	2022년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포상 업무계획(안)	원안의결
2	제23회	02.07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자치사무경찰 상반기 정기인사 전보임용	원안의결
3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경쟁급 지구대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원안의결
4	제24회	02.09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경감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수정의결
5	제25회	02.14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2.15주 심사·시험승진 후보자 승진임용	원안의결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심의결과
6	제26회	02.24	정기회의	영상회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7					2022년 경기북부 자치경찰사무 연간 감사계획	원안의결
8					상반기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추천 위원 후보자 명부 갱신	원안의결
9					2022.3.1일자 심사·시험승진후보자 승진임용	원안의결
10	제27회	03.17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위기대응팀 확대운영 계획』	수정의결
11	제28회	03.30	정기회의	영상회의	2022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 평가계획	심의보류
12					2022년 4월 1일자 자치사무 경찰관 근속승진대상자 승진임용	원안의결
13	제29회	04.14	임시회의	영상회의	경기북부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주기 변경	원안의결
14					행복마을관리소 협력을 통한 도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원안의결
15	제30회	04.28	정기회의	위원회실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환경개선)	원안의결
16					2022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 평가계획	원안의결
17					경기도북부경찰청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 승진임용(4.30일 후 심사·시험승진 후보자)	원안의결
18	제31회	05.26	정기회의	위원회실	2022년 자치경찰제 추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안)	원안의결
19	제32회	06.14	임시회의	영상회의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임용추천 협의	원안의결
20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1회계연도 결산(안)	원안의결
21					2022년 자치경찰사무 인권진단 추진계획	원안의결
22					2022년 상반기 퇴직예정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원안의결
23	제33회	06.28	임시회의	영상회의	경기도북부경찰청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 승진임용(6.30자 심사·시험 승진 및 7.1자 근속승진 대상자)	원안의결
24					2022년 상반기 퇴직 관련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수정의결
25	제34회	06.30	정기회의	위원회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 관련 '접경지역 둘레길 치안인프라 구축'	원안의결
26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내 일시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개선'	원안의결
27					2022년 '어린이폴리스 교실' 사업계획	원안의결
28	제35회	07.14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상반기 퇴직 관련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원안의결
29	제36회	07.28	정기회의	위원회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의결
30					『행복마을관리소 협력을 통한 도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확대 운영 계획	원안의결
31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원안의결
32	제38회	08.05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하반기 경기도북부경찰청 자치사무경찰 정기인사 전보임용	원안의결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심의결과
33	제39회	08.09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 경감급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원안의결
34	제40회	08.12	임시회의	영상회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안)	원안의결
35	제41회	08.25	정기회의	위원회실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추천위원 후보자 명부 갱신	원안의결
36	제42회	08.30	임시회의	영상회의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 승진 및 전보 임용(9.5.주 심사승진 및 전보 대상자)	원안의결
37	제44회	09.27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10월 1일주 자치사무 경찰관 근속승진대상자 승진임용	원안의결
38					양주경찰서 남면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원안의결
39	제45회	10.27	정기회의	북부경찰청	도민과 함께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원안의결
40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41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 승진임용(10.31.주 시험승진 및 11.1.주 근속승진 임용)	원안의결
42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포천경찰서 가산파출소장)	원안의결
43	제46회	11.07	임시회의	위원회실	2022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 평가결과	원안의결
44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체계 확립에 관한 건	원안의결
45	제47회	11.25	정기회의	영상회의	지역 치안·주민생활 안정시책 특별교부세 신청	원안의결
46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 승진임용(11.30.주 심사·시험승진 및 12.1.주 근속승진 임용)	원안의결
47					2022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정기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 추천 위원 선정	원안의결
48	제48회	12.22	정기회의	위원회실	2022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정기 특별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원안의결
49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수정의결
50	제49회	12.28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3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심사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수정의결
51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 승진임용	원안의결

### • 보고 51건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1	제19회	01.19	임시회의	영상회의	경기도북부경찰청 자치경찰부 계장급 전보인사 보고
2	제20회	01.25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자치경찰부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보고
3	제21회	01.27	정기회의	영상회의	2022년 경기북부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4					2022년 사무국 업무보고
5					2021년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추진 결과보고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6	제22회	02.04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상반기 정기인사 경찰서 과장급 관련 보고
7	제25회	02.14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자치경찰 주요 업무계획
8	제27회	03.17	임시회의	영상회의	위기대응팀 확대운영 및 위기아동보호센터 신설 추진계획
9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운영 업무협약 체결계획
10					순찰차 활용 자치경찰제 홍보 방안
11	제28회	03.30	정기회의	영상회의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12					범죄예방강화구역·여성안심귀갓길 정비 및 내실화 추진
13					남양주 권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시범운영 추진
14	제29회	04.14	임시회의	영상회의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계획
15					현장 경찰관 자가진단키트 지원 추진
16					2022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장 평가계획
17	제30회	04.28	정기회의	위원회실	2022년 상반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현황
18					2022년 부처님 오신 날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19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선발 및 발대식 계획
20	제31회	05.26	정기회의	위원회실	2022년 자치경찰 등 복지포인트 지원 운영계획
21					6월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운영계획
22					2022년 어린이폴리스 운영계획
23	제32회	06.14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상반기 『자치경찰 감정근로자 힐링교육』 운영계획
24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기념식(안)
25					2022년 상반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26	제35회	07.14	임시회의	영상회의	(위원회-도로교통공단-북부경찰청) 경기북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27					순찰차 활용 자치경찰제 홍보 기간 연장
28	제36회	07.28	정기회의	위원회실	행복마을관리소-자치사무 담당 경찰 협력체계 시범운영 결과
29					9월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운영계획
30	제37회	08.03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경기도북부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 보고
31	제41회	08.25	정기회의	위원회실	교통안전과 주민불편 해소 위한 도시부 일부 구간 제한속도 개선 추진
32	제42회	08.30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2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33	제43회	09.15	정기회의	위원회실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현황 보고(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환경 개선(TAPTED))
34					'22년 10월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운영계획 보고
35					'22년 하반기 자치경찰 감정근로자 힐링교육 운영계획
36	제44회	09.27	임시회의	영상회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문화정착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추진 경과보고
37					2022년 하반기 자치사무 경찰관 인원 보고
38	제45회	10.27	정기회의	북부경찰청	2022년 하반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39	제45회	10.27	정기회의	북부경찰청	정신질환자 보호조치팀(정신응급 현장지원팀) 운영 성과
40	제46회	11.07	임시회의	위원회실	'22년도 자치경찰 감정근로자 힐링교육 운영결과
41					가산파출소장 직위공모 필수요건 예외조항 근거(제45회 정기회의 요구자료)
42					2022년 하반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43	제47회	11.25	정기회의	영상회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 혼잡경비 안전대책
44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경과
45					2022년 자치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계획
46	제48회	12.22	정기회의	위원회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본예산
47					지역 치안 · 주민생활 안정시책 특별교부세 공모결과
48					2022년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운영결과
49					경기북부 자치경찰 및 도민대표와의 권역별 간담회 개최 결과
50					2023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일정
51					『위기아동 보호센터』 설립 추진 경과

## ■ (2023년) 총 50건(심의·의결 28건, 보고 22건)

### • (심의·의결) 28건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심의결과
1	제50회	01.12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3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원안의결
2					2023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 추진계획	원안의결
3					2023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포상 업무계획(안)	원안의결
4					2023년 경기도북부경찰청 경위 이하 심사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원안의결
5	제51회	01.26	정기회의	위원회실	2023년 경기북부 자치경찰사무 연간 감사계획(안)	원안의결
6					2023년 자치경찰 청렴도 향상 · 인권보호 추진계획(안)	원안의결
7					자치사무 담당경찰관 근속승진임용(2023년 2월 1일부)	원안의결
8	제53회	02.10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3년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운영계획	원안의결
9	제55회	02.14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3년 상반기 경기도북부경찰청 자치사무경찰 정기인사 전보임용	원안의결
10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경쟁급 지구대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원안의결
11	제56회	02.16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경감급 지구대 · 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원안의결
12	제57회	02.23	정기회의	위원회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13					2023년 3월 1일부 자치사무 경찰관 근속승진대상자 승진임용	원안의결
14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승진임용식 운영계획(안)	원안의결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심의결과
15	제57회	02.23	정기회의	위원회실	2023년 상반기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후보자 명부 갱신	원안의결
16					2023년도 경기도북부 자치경찰 교육훈련 기본계획(안)	원안의결
17	제59회	03.30	정기회의	위원회실	2023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평가계획(안)	원안의결
18					2023년 경기도북부경찰청 특별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원안의결
19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 승진임용(4.1.차 근속승진 및 4.6.차 심사·시험승진 임용)	원안의결
20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지침안	원안의결
21	제61회	04.27	정기회의	위원회실	2023년 자치경찰사무 담당자 복지포인트 지원 운영계획(안)	원안의결
22					2023년 5월 1일자 자치사무 경찰관 근속승진대상자 승진임용	원안의결
23	제62회	05.18	임시회의	영상회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원안의결
24	제63회	05.30	정기회의	영상회의	2023년도 자치경찰 추진·운영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안)	원안의결
25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26	제64회	06.29	정기회의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1영상 회의실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 승진임용(6. 30.차 2차 심사·시험승진 및 7. 1.차 근속승진 임용)	원안의결
27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의결
28					2023년 상반기 퇴직 관련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원안의결

#### • (보고) 22건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 건 명
1	제50회	01.12	임시회의	영상회의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결과(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환경개선(TAPTED))
2	제51회	01.26	정기회의	위원회실	2023년 사무국 업무보고
3					2022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4	제52회	02.01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3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자치경찰부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보고
5	제53회	02.10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3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자치경찰부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보고
6	제54회	02.13	임시회의	위원회실	2023년 경기도북부경찰청 상반기 정기인사 보고
7	제57회	02.23	정기회의	위원회실	2023년 자치경찰부 주요 업무계획
8					2023년 자치경찰제 발전 유공자 도지사 포상계획(안)
9	제58회	03.16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3년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사항
10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백서 제작계획
11	제59회	03.30	정기회의	위원회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이전 계획 보고
12					2023년 상반기 경기도북부경찰청 자치사무 경찰관 인원 보고

번호	회차	일시	방법	장소	안건명
13	제60회	04.13	임시회의	영상회의	자율방범대법 시행 관련 업무추진 현황보고
14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2기 선발 및 운영계획 보고
15	제61회	04.27	정기회의	위원회실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추진
16	제62회	05.18	임시회의	영상회의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특별방범활동 계획
17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운영 현황 보고
18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지원 추진사항 보고
19	제63회	05.30	정기회의	영상회의	범죄예방진단팀 및 자율방범대 활동 현황 보고
20					여성청소년과 주요 범죄 현황 및 추진업무 보고
21					교통 사망자 발생 현황 및 분석·추진 방향
22	제64회	06.29	정기회의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1영상 회의실	위원회 1호 시책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추진사항 보고



## 2. 실무협의회 운영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사전 검토 및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간의 협력·조정 등을 위해 '21. 9. 30. 우리 위원회의 결을 거쳐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과장 19명을 위원으로 하는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1. 11. 9.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등 11개 안건을 대상으로 제1회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31건에 달하는 자치경찰 분야 안건을 발굴하여 밀도 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 출범 당시 20명이던 실무협의회는, 경기도청 공동체지원과장을 추가로 위촉하여 현재 총 21명으로 증원하였고, 정책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들에게도 참여의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의견을 넓히고 점차 그 내실을 쌓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유도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자치경찰상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제1회 실무협의회 개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 ■ 사업개요

##### • (관련근거)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 (구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및 관계기관 과장급 위원(총 21명)

- (위 원 회) 3명(사무국장(위원장), 북부기획조정과장,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 (경기도청) 12명(정보통신보안담당관, 건축디자인과장, 노인복지과장, 공공의료과장, 정신건강과장, 청소년과장, 여성정책과장, 아동돌봄과장, 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장, 도로안전과장, 교통정보과장, 공동체지원과장)

- (도경찰청) 4명(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
- (도교육청) 2명(학교안전과장, 생활인성교육과장)

#### ■ 추진계획

- (운영) 정기회의(분기별 1회) 및 임시회의(수시) 개최

#### 그간 추진경과

-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규정」 마련('21. 9. 30. 의결, 자경위 훈령 제4호)
- ▶ 2021~2022년 실무협의회 개최 : 총 6회('21년 1회, '22년 4회, '23년 1회)
- ▶ '동 운영규정' 개정('22. 10. 27. 의결, 자경위 훈령 제8호)
  - 위원 1명 추가(도자치행정과장) 및 도교육청 課 명칭변경(학생생활인권과 → 학생생활교육과)
- ▶ 실무협의회 위원 변경(도자치행정과장 → 도공동체지원과장) ('23. 2. 23. 의결)
- ▶ 실무협의회 위원 변경(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장 → 학교안전과장,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 생활인성교육과장) ('23. 5. 30. 의결)

#### • (기관별 역할)

기 관 명	주요 역할
북부자치경찰위원회	• 협의회 구성·운영, 국가·자치경찰사무 조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경기도청	• 자치경찰 재정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 치안 관련 정책 협의 등
경기북부경찰청	• 일선 치안현장 건의사항 수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경기도교육청	• 학교안전지킴이, 스쿨존, 학·폭, 위기청소년, 아동학대 등에 관한 협업

#### ■ 기대효과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사전 검토 및 국가·지방경찰사무 협력·조정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2023.6.30. 현재

구분	횟수	안 건
총계	6	
2021년	1	위기가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등 11개 사업
2022년	4	청년 서포터즈 구성, 운영방법 및 활동 등에 대한 기관별 협력사항 논의 등 16개 사업
2023년	1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기관별 협력 등 4개 사업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 세부내용

### ■ (2021년) 총 1회(11건 논의)

제1회 실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1. 11. 9.(화) 14:00 ~ 15:30</li> <li>• 장 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li> <li>• 참석자 : 사무국장 포함, 총 17명</li> </ul>	제안부서
1. 위기가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담공무원 배치하여 추진 중이고, 경찰에서도 남양주시 시범 실시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임	북부자치 경찰협력과
2.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	• 경기 남부에 비해 북부는 건물노후,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답보 상태 → 병원 대상 협조 요청 지속 추진 예정	북부자치 경찰협력과
3.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 심야 주말 등 입원실 확보공관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애로 → 공중보건의 및 병실 확보에 지속 노력 필요	북부자치 경찰협력과
4. CCTV 통합관제센터 경찰인력 배치·증원	• 경찰 인력운영 효율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발전 방안 검토 예정 ※ 근무환경 개선 필요(도경찰청)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5. 위기청소년 발굴연계 등 협조	• 11/8~12/3까지 청소년 보호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청소년 안전활동 및 합동점검 추진	청소년과
6. 경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 기간간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합의 ※ 예산 확보 및 민간단체와의 역할조정 면밀검토 필요	여성정책과
7. 아동 학대 합동대응 체계 구축 및 강화	• 31개 시·군에 배치된 전담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아동돌봄과
8. 방범CCTV 화질개선 예산 협조	• 민선 7기 종료 임박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으나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등 지원대책 검토 예정(정보통신보안담당관)	생활안전과
9. 교통예산 확보 위한 합동 방문 협조	•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자치경찰협력과)	교통과
10. 학교폭력 예방조례개정 필요	• 관련 부서별 해당 조례 현행화에 적극 지원키로 합의	여성청소년과
11. 학교 - 도교육청 - 자치경찰 유기적 협조	• 학교밖 아이들, 학폭 피해자 등 대상으로 관계 기관에서 협력하여 계속 보호해 나가기로 합의	학생생활 인권과

■ (2022년) 총 4회(16건 논의)

제2회 실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2. 2. 23.(수) 14:00 ~ 14:45</li> <li>• 장 소 :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li> <li>• 참석자 : 사무국장 포함, 총 8명</li> </ul>	제안부서
1. 청년 서포터즈 구성, 운영 방안	• 도경찰청, 지역 대학(경동대, 신한대) 교수, 정책자문단 등 기관별 지원방안 세부 논의	북부기획 조정과
2. 협약체결 및 협약식 진행	• 협약 문안 내용, 협약식 진행 방안 등 협의	북부기획 조정과
제3회 실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2. 5. 30.(월) 13:50 ~ 15:10</li> <li>• 장 소 :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li> <li>• 참석자 : 사무국장 포함, 총 5명</li> </ul>	제안부서
1. 고위험 정신질환자 상시 응급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질환자 공공병상 확보에 참여 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필요</li> <li>→ 응급실 1개소 운영에 전문의 5명과 예산 12억원이 필요하여 현재 설치 희망 병원이 없는 상황이나, 도경찰청 위기개입팀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인력·예산 추진</li> </ul>	북부자치 경찰협력과
2.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비의료인인 경찰관으로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립이 절실</li> <li>→ 최근 구리 한양대학교 병원과 협조하여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개소. 앞으로 도립 파주의료원에 추가설치를 검토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지속 공조</li> </ul>	북부자치 경찰협력과
제4회 실무협의회 (교통관련 정책협의회 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2. 7. 15.(월) 14:00 ~ 15:40</li> <li>• 장 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li> <li>• 참석자 : 실무협(10)·정책자문단(6)·도민대표(7) 등 총 23명</li> </ul>	제안부서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검토 (도민대표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이후 탄력적인 주차 허용 민원 다수</li> <li>→ (贊) 학원 및 상가, 심야시간 등 장소·시간대별 분석을 통해 일부 허용 검토 가능</li> <li>→ (反) 제도시행 후에도 사고발생율에 변화가 없는 편이고,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으며, 잦은 제도변경으로 운전자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li> </ul>	교통과
2. '안전속도 5030' 도시부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도민대표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거나 사실상 차량들만 이용하는 도로 11개 구간 최고제한속도를 50km/h에서 60km/h로 상향 검토</li> <li>→ (贊) 보행자 안전을 담보로 허용이 가능하고, 차량 경제속도 90km/h 등 감안, 효과적인 홍보를 병행한 시범 실시에 동의</li> <li>→ (反) 제도시행 후 얼마되지 않아 변경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고, 시설 변경에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어 시기상조로 보여짐</li> </ul>	"
3. 차량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민원 해소방안 (도민대표 퇴장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 민원 해소에 각 참석자 모두 공감하고, 단속기준이 105db로 다소 높아 효과적 규제가 어렵지만, 경찰-지자체-교통 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단속해 나가기로 협의</li> </ul>	북부자치 경찰협력과

제5회 실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2. 12. 16.(금) 10:00 ~ 11:00</li> <li>• 장 소 :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li> <li>• 참석자 : 사무국장 포함, 총 7명</li> </ul>	제안부서
1. 낙후된 와부파출소 시설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관서 신축 업무는 국가경찰 사무, 도경찰청의 협조 필요 → 현 와부 파출소 부지가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편입,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필요. 다만, 신축 전이라도 필요시 시설예산 지원 예정(경무과장)</li> </ul>	북부 기획조정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제안)
2. 개인사비(私費) 지출 억제용 차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경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18대분 편성추진 중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 → 도경에서도 자치부서 요청시, 관리중인 차량 적극 배차 (경무과장)</li> </ul>	북부 기획조정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제안)
3. 지역경찰관서 소속을 생활안전과로 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 자치 경찰이 완전 분리되는 '이원화 자치경찰 제도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향후 제도 개선시 적극 반영 →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경무과장)</li> </ul>	북부 기획조정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제안)
4. 자율방범대 지원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4월 경, 관련 규정이 확정되면 원활한 지원대책 마련 예정 → 자경위와 협의, '자방대 운영활성 계획' 추진(생안과장)</li> </ul>	북부 기획조정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제안)
5. 행복마을관리소 활동지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가평 시범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지침 마련 예정 → 분기별 추진성과 분석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예정(생안과장)</li> </ul>	북부 기획조정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제안)
6. 학부모 폴리스 지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학폭 활동 성과 분석 후 여타 협력단체 지원수준 등 감안하여 적정 지원 필요 → 유니폼 통일 등 지원 대책 검토에 앞서 현재 운영실태 파악 및 소통 활성화 추진 예정(여청과장)</li> </ul>	북부 기획조정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제안)
7. 도시·농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건의로서, 여건이 허용하는 한 반영이 필요 → 어느정도 실행 중이나 앞으로도 도시 - 농촌 상이한 교통여건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교통과장)</li> </ul>	북부 기획조정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제안)
8. 어린이 교통준법 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경위에서도 '어린이폴리스 교실' 등 교통 준법익식 제고 시책 지속 추진 예정 →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교육 및 홍보강화 추진(교통과장)</li> </ul>	북부 기획조정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제안)
9.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저 관할 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고, 예산확보 등 지원 강화 검토 필요 → 지자체 예산 사업임을 감안,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 유도(교통과장)</li> </ul>	북부 기획조정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제안)

## ■ (2023년) 총 1회(4건 논의)

제6회 실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3. 6. 13.(화) 14:00 ~ 15:20</li> <li>• 장 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li> <li>• 참석자 : 실무협의회 11명, 정책자문단 3명 등 총 14명</li> </ul>	제안부서
1.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협조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쿨존 주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안전 인력 확충으로 학생들의 안전도 제고 필요</li> <li>→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 협력하여 교통안전 시설 등 점검·개선을 추진하고,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조하여 학교주변 교통안전 활동 실효성 제고 추진</li> </ul>	경기도 교육청 학교안전과
2. 여성 대상 범죄예방 활동 추진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검출스티커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등 시설보강으로 대 여성범죄 예방에 협조 당부</li> <li>→ 마약검출스티커 효과성 분석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학교 등에 배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편으로 다른 홍보 대책 검토 요청 / 화장실의 경우 시설주와의 협조 과정 마련 필요</li> </ul>	경기북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3. PM,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위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 PM 활성화 등으로 인한 청소년 교통사고 대책 필요</li> <li>→ 각종 홍보자료 등 활용하여 학생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하되,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li> </ul>	경기북부 경찰청 교통과
4.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협조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저항 등 발생, 협조 요청 건의</li> <li>→ 인력확보 애로 등 현실적 제약이 있으나 성매매 단속 등 지속 추진하고, 소방 등 관계기관 참여 제고 방안 필요</li> </ul>	경기도청 여성정책과



### 3. 정책자문단 활용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도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다양한 분야 지역 주체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 정책·제도 관련 자문 및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자치경찰 제도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 자치경찰 전문가, 도민 등 22명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역 주체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신규정책 발굴, 기존사업 외연 확장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적 자문, 현장의견 수렴 등을 위해 자문단을 활용하고 있다. 신규사업 발굴 시에는 사업내용, 추진 가능성 등 자문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중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확대,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 모색 등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간 정책자문단은 <청년 서포터즈 구성 운영방법> 등 총 15건의 사업관련 자문을 추진하였다.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현장)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제2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보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민에 조금 더 가까운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자문단 활용 실적

2023.6.30. 현재

연 도	일 자	주요내용(15건 자문)	참 석
2021	12.15	위촉식 및 설명회	전체
2022 (5회 10건)	2.23	① 청년서포터즈 구성, 운영방법 등 협의	분야별
	5.23	① 어린이폴리스 운영 ② 스톱킹 대응체계의 개선과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③ 행복마을관리소 협력을 통한 도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④ 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환경개선 등 4건	전체
	7.15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검토 ② '안전속도 5030' 도시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③ 차량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민원 해소방안 검토 등 3건	분야별
	7.20	① 자치경찰사무수행 현장 인권진단	분야별
	11.8, 10	①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분야별
	1.19	①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자문 및 의견수렴	전체
2023 (2회 5건)	6.13	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② 여성대상 범죄 예방 ③ PM·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④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 등 4건	분야별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 ■ 추진배경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의 균형성과 효용성 제고
- 도민의견 수렴 및 소통체계 마련으로 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 ■ 구성개요

- (기능) 자치경찰 정책·제도관련 자문
- (임기) 구성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 ※ '21.12.15 ~ '23.12.14
- (구성) 22명 인력풀 구성(당연직 3명, 위촉직 19명)
  - 당연직(3명) : 사무국장(단장), 북부기획조정과장,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 위촉직(19) :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제도개선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 道 관련 부서(여성가족국, 교통국 등), 경찰청, 교육청 등에 분야별 추천 요청, 26명의 추천자 중 이력, 적합성, 분야별(생안, 여청, 교통 등)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선정

분야 계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8)					교통	기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19	1	3	1	2	1	1	3	7

\* 제도개선 1. 자치경찰일반 2. 자치경찰-지방행정 연계 1, 언론-홍보 1, 도민-여론 2

### ■ 자문단 운영

- (운영방법) 자문단 인력풀에서 안건 내용에 따라 10명 내외 선정·소집
- (개최시기) 분기별 1~2회(필요시 수시)



▲ 위촉식 및 설명회('21.12.)



▲ 자문단 회의('22.5.)



▲ 자문단 회의('23.1.)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명단

### ■ 자문단 현황 : 총 22명(당연직 3명, 위촉직 19명)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정용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청	사무국장	당연직(단장)
2	김민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청	북부기획조정과장	당연직
3	김영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청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당연직
4	김수영(女)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위촉직(생활안전)
5	김양순(女)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소장	위촉직(여성)
6	이정아(女)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위촉직(여성)
7	정인숙(女)	여성긴급전화1366경기북부센터	대표	위촉직(여성)
8	최승천(女)	고양동산초등학교	교장	위촉직(아동)
9	김영규	저동중학교	교장	위촉직(청소년)
10	유승오(女)	의정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실장	위촉직(청소년)
11	김지순(女)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위촉직(노인)
12	박현희(女)	경기북부장애편권익옹호기관	관장	위촉직(장애인)
13	김성태	가평모범운전자회	대표	위촉직(교통)
14	윤상희	도로교통공단경기지부	차장	위촉직(교통)
15	황기홍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	부장	위촉직(교통)
16	심익섭	의정부시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위촉직(제도개선)
17	안영훈	(사)한국자치경찰연구원	원장	위촉직(자치경찰일반)
18	이기우	인하대 대학원	교수	위촉직(자치경찰일반)
19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촉직(경찰-행정 연계)
20	지태구	팩트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위촉직(언론, 홍보, 여론)
21	이일훈	(주)호호T&G	대표	위촉직(도민여론)
22	노동훈	카네이션요양병원	병원장	위촉직(도민여론)

## 4. 도민 의견수렴

**도민 의견수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분야별 치안현황과 수요파악을 위한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치경찰제 시행 첫해인 '21년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경기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도민 4,000명(경기북부지역 1,243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내용은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자치경찰제 인식 등 총 4개 분야 10문항으로 실시하였다.

### 2021년 도민 여론조사

- 조사기간 / 방법 : 2021. 8. 20(금) ~ 8. 23(월) / ARS 조사
- 조사내용 : 4개 분야 10문항(생활안전 3, 사회적약자 보호 2, 교통안전 2, 자치경찰제 인식 3)
- 조사대상 : 만 18세 이상 남녀 도민 4,000명(경기북부 1,243명)
- 조사기관 : ㈜리얼미터 (홍보콘텐츠담당관 협조)

설문 결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자의 39%가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39%)을 선택했다. 이어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24%), '지역주민 참여소통 강화'(12%), '교통안전 확보'(10%), '경찰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 지원 정책'(8%) 순으로 응답했다.

분야별 치안 안전도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거주지역 생활안전 분야는 74%, 사회적 약자 안전 분야는 59%, 교통사고 안전 분야는 61%의 응답자들이 '안전하다'고 답변하여 절반이 넘는 도민이 경기도의 치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안전 분야에서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가장 위협받는 장소로는 '유흥·번화가 등 상업지역'(30%), '노후주택 밀집 주거지역'(22%)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활동으로는 '방법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37%), '범죄 취약 지역 환경개선'(35%) 순으로 나타나, 추상적인 예방활동보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예방 정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29%)와 '성범죄'(25%)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아동학대'(15%), '가정폭력'(8%), '노인학대'(7%), '장애인 대상 범죄'(4%)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로는 '이륜차 법규위반'(32%)을 가장 많이 꼽아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불법 주행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음주운전'(17%), '과속신호위반'(15%) 순이었다.

자치경찰제 인지도 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73%가 자치경찰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56%가 경기도자치경찰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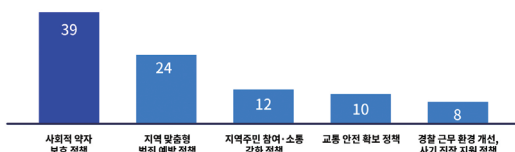
### 2021년 도민 여론조사 결과

문항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1	우선 추진 정책	① 사회적약자 보호(39%) ② 지역맞춤형 범죄 예방(24%) ③ 주민참여·소통(12%)
2	지역사회 범죄안전성	① 매우 안전(25%) ② 대체로 안전(49%) ③ 안전하지 않다(24%)
3	사회적 약자 안전성	① 매우 안전(12%) ② 대체로 안전(47%) ③ 안전하지 않다(37%)
4	교통사고 안전성	① 매우 안전(9%) ② 대체로 안전(52%) ③ 안전하지 않다(36%)
5	생활안전 위협 장소	① 유흥상업지역(30%) ② 노후주거지역(22%) ③ 공장밀집지역(13%)
6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	① 범죄예방시설 설치(37%) ② 환경개선(35%) ③ 순찰 계도(14%)
7	시급한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① 청소년범죄(29%) ② 성범죄(25%) ③ 아동학대(15%)
8	교통안전 위협 요소	① 이륜차 법규위반(32%) ② 음주운전(17%) ③ 과속신호위반(15%)
9	자치경찰제 인식	① 잘 안다(15%) ② 들어본적 있으나 잘모름(58%) ③ 처음 들음(27%)
10	자치경찰제 기대감	① 매우 도움(15%) ② 대체로 도움(41%) ③ 도움되지 않음(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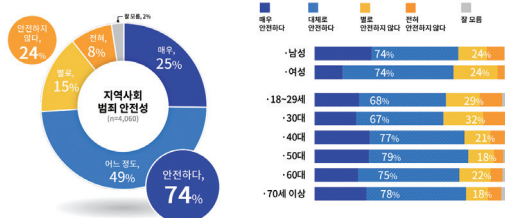


## 2021년 도민 여론조사 결과

### 1. 자치경찰이 어떤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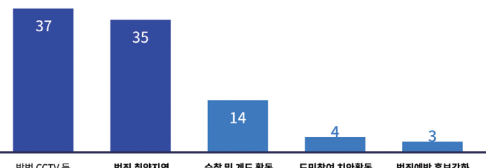
### 2. 거주하는 시·군은 타지역에 비해 범죄로부터 안전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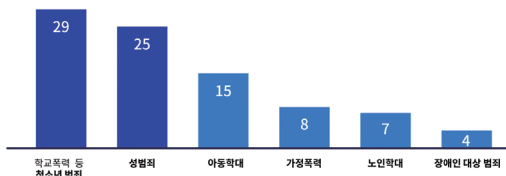
### 3.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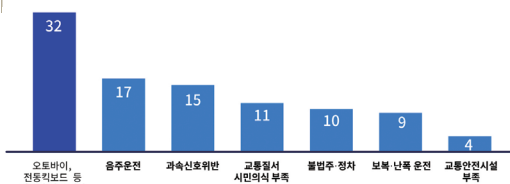
### 4.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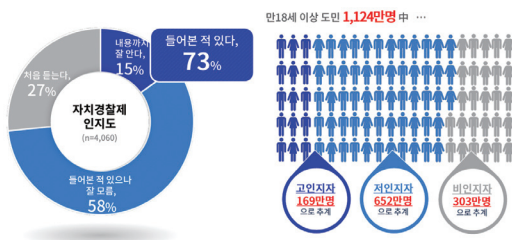
### 5.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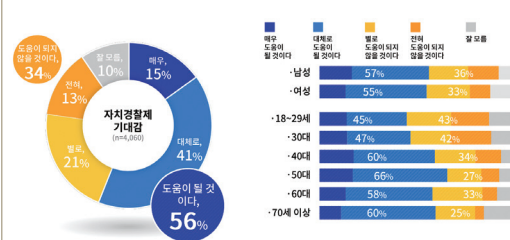
### 6.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위험이 되는 요소는?



### 7.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8. 자치경찰제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04

## Section 4

### 주요정책

## **① 현장중심 치안활동 강화**

1.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2.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3.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 구축
4. 자치경찰 전용차량 지원

## **② 사회적 약자 보호**

1.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2. 스톱킹 STOP!! 지능형 홈CCTV 구축
3. 어린이폴리스 운영

## **③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 개선
2. 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교통환경 개선
3.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추진

## **④ 감사평가 및 청렴인권**

1. 자치경찰사무 감사
2.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3. 인권 보호 및 자치경찰 청렴도 향상

## **⑤ 인사 및 교육**

1. 임용권 행사
2. 교육 및 포상

## **⑥ 사기진작**

1.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복지포인트 지원
2.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Section 4. 주요정책

You want, We go!

### 1 현장중심 치안활동 강화

#### 1.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행복마을관리소 협력을 통한 도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출범 이후 경기도북부 자치경찰 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북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정책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도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제고하고 도민들과 꾸준히 공감·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왔다.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그간 추진해오고 있던 경기행복마을관리소와 경찰서의 치안활동을 연계하여 도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행복마을관리소는 행안부 민관협업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주민주도형 자치모델 실현 우수사업이다.

####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사업현황 (道 공동체지원과)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상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공공일자리 창출(개소당 10명)
  - ※ 행복마을관리소는 면적 66㎡(20평) 이상 공공건물(민간건물 임대 가능)
- (행복마을지킴이) 안전순찰, 여성안심귀가, 아동안심등하교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도로 등 위험요인 발굴·시정 요청,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 (행복마을사무원) 행복마을관리소 행정업무, 지킴이 업무지원 등
  - ※ '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민관협업분야 최우수 선정/ 전국적 확산 필요 7대 중점과제(행안부)
- 운영지역 : '23년 101개소(경기북부 44개소\*, 남부 57개소)
  - \* 북부: 고양2, 남양주6, 파주12, 의정부1, 양주6, 구리2, 포천7, 동두천1, 가평6, 연천1

2023년 현재 행복마을관리소는 총 10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경기북부 10개 시군에는 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행복마을지킴이가 상주하면서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생활환경 개선, 주민생활 편의지원 등을 제공하며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및 문화활동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주체와 협업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활동 거점 마련을 통한 주민자치와 복지를 실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위원회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 관련 조례에 ‘경찰 등 치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과의 협력이 미비한 점을 확인,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으로 경찰관이 위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한 협업을 통해 ‘행복마을 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우선, 구리시와 가평군 2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하여 북부 3개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계획하였다. 시범사업 추진 시 경기북부는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도시, 농촌, 도농복합형 시군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점을 고려하였는데, 도시형 모델은 구리시, 농촌형 모델은 가평군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해당 경찰서의 범죄안전진단팀(CPO, Crime Prevention Officer)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주민과 유대감이 형성된 행복마을지킴이를 통해 치안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치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시범운영 중 운영위원회(9회)를 통하여 지하철역 등 자전거 보관소 점검, 버스정류장 야간 불안감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등 치안안전(10건) 발굴, 행복마을지킴이와 범죄취약지 합동순찰(28회), 교통사고 예방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교육(8회)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여 행복마을관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경기북부 3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 행복마을관리소 - 자치경찰 간 협력사항

분 야	주 제	내 용
생활 안전	노인대상 범죄예방	•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홍보자료 제공
	농산물 절도예방	• 농작물 등 현황 파악, 보관장소 등 취약지점 선제적 예방활동
	범죄안전진단	•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안전진단 실시
여성 청소년	비행청소년 우려지역 범죄예방활동	• 비행청소년 신고다발지에 대해 합동순찰·계도 및, 환경개선
	학대가정 발굴	• 노인·아동 학대 의심가정 경찰 연계로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노인 실종 예방	• 독거·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행복마을지킴이가 관내 우렁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 배회감지기 사용 및 특이사항 점검
교통	보호구역 시설개선	• 행복마을지킴이 및 지역주민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설개선
	교통사고 예방	• 보행자 안전수칙, 교통 법규 등 교통안전 교육·홍보

## 행복마을관리소 - 자치경찰 협업체계 구축



▲ 시범운영 업무협약



▲ 범죄취약지역 합동순찰



▲ 범죄예방교육 추진

이처럼 행복마을관리소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2년 말 기준 행복마을관리소와 합동순찰 112회, 범죄예방교육 74회 등을 실시했으며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히 처리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대책들을 지역치안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시군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 : 지역사회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서 운영 협의체

\*\* 지역치안협의회 :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 운영 회의체

## 행복마을관리소 - 자치경찰 간 확대 운영 현황

구분	합동순찰	범죄예방교육	운영위 참석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 안건 발굴	지역치안협의회 안건 발굴
계	112회	74회	89회	123건	3건

### 안건 발굴



▲ 범죄예방 LED 부영이 우체통



▲ 화장실 내 성범죄 예방 활동



▲ 범죄예방 지팡이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인적·물적·제도적으로 모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치안시책을 접목하면 현재 부족한 인프라의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행복마을관리소와 같은 지역에 특화된 지방행정에 치안행정을 융합하여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2.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경찰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총 범죄는 1,247,680건인데, 이 중 17.66%(220,245건)는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다. 그리고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는 22,992건 중 29.44%(6,768건)에 달한다. 경기북부경찰청 주취자 신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폭증하여 2022년은 28,472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경찰서당 하루평균 6건의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 경기북부 주취자 신고 건수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전체 신고	1,091,244건	1,101,513건	1,103,474건	1,146,451건
주취자 신고	33,472건	27,416건	19,873건	28,472건
비율	2.60%	2.49%	1.80%	2.48%

### 사회적 거리두리 해제('22.04.18) 전후 3개월 경기북부 주취자 신고 추이

구분	1.16. ~ 4.17.	4.18. ~ 7.17.	증감
신고건수	4,331	8,561	▲4,230건 (▲97.7%)

더구나 만취자는 범죄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보호조치에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른 치안공백을 방지하고자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기북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0개 시도에서 20개소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현황

계	서울	제주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20	6	3	2	1	1	1	1	1	2	1	1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위해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하여 여러 민간병원을 접촉하여 운영 의사를 타진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응급실이 폐쇄된 곳이 많아 주취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경찰관이 근무할 장소 확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속적인 설득 끝에 마침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2022년 5월 16일 개소하여 2022년 말까지 121건의 주취자 보호조치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경기북부 3개 권역(의정부·고양·남양주)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설치를 목표로 병원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보호조치 현황

성 별	남	여
	103	18

연 령 별	60세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39	35	17	10	19	1

###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 3.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 구축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지원 현장지원센터 구축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은 급격한 증가 추세('21년 348건(월평균 29건) → '22년 570건(월평균 47.5건), 63.8% ↑)이나, 입원가능한 응급의료시설 부족으로 신속한 조치가 불가하여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은 112 신고출동에서 응급입원까지 평균 2시간 58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심지어 병원을 찾아 서울, 강원도 등 타 시도까지 가는 여부를 타진해봐야 하는 실정이다.

월별 응급입원 변동 추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년	348	9	14	21	22	36	36	47	33	35	32	29	34
'22년	570	37	28	29	40	58	54	46	55	54	63	58	48
대비(건)	▲148	▲28	▲14	▲8	▲18	▲22	▲18	▼1	▲22	▲19	▲31	▲29	▲14
증감율(%)	▲58.5	▲311.1	▲100	▲38.1	▲81.8	▲61.1	▲50.0	▼2.1	▲66.7	▲54.3	▲96.9	▲100	▲41.2

평일 주간은 경기북부지역 23개 정신의료기관과의 연계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야간 및 일요일은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 부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민간병원의 경우는 인력부족과 수익성의 문제로 24시간 공공병상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도 전문의사 인력 부족으로 제한운영(월~목 08:30~22:00, 금 08:30~17:00 운영, 주말 및 법정공휴일 미운영)되는 등 원거리 이송으로 인한 현장 경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피해는 '치안공백'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현장 경찰관의 원거리 이송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요청 시 출동하여 응급입원까지 책임지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경기북부 경찰청 내에 설치하였다. '22년 8월 10일부터

####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22년 말까지 252건(응급입원 81건, 상담지원 121건, 병원연계 50건)의 현장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처리시간도 평균 1시간 58분으로 단축되는 성과가 있었다.

향후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의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무공간 조성 및 출동차량 확보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상시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4. 자치경찰 전용차량 지원

**자치경찰 전용차량 지원** 신속한 현장중심 치안활동을 강화하여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 전용차량을 지원하였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건의사항은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자치경찰 전용차량 지원이었다.

자치경찰사무는 업무특성 상 가정폭력아동학대 조사부터 교통사고 현장점검, 시설개선까지 많은 부분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 관용차량 부족으로 배차가 원활하지 않아 경찰관이 개인차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치안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경기북부경찰청 교통담당 관용차량 배차 비율은 약 30% ~ 40%(미배차 시 개인차량, 대중교통 등 이용).

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부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2023년 마침내 위원회의 노력과 경기도, 도의회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으로 자치경찰 전용차량 지원 예산 3억 4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전기차량 30대를 경기북부경찰청 및 경기북부 13개 경찰서 여성청소년, 교통 등 관련 부서에 배정하여 현장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해당 차량 랩핑광고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홍보하여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와 체감 안전도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경찰 전용차량 지원은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지원 사례로 경기도 자치경찰의 자긍심과 위상이 제고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개인차량으로 현장 활동을 수행하던 자치경찰 부서 경찰관들의 고충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례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전용차량 지원을 통한 현장중심 활동 강화로 경기도 치안환경 개선 및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 등 도민 안전을 더욱더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치경찰 전용차량 활용 사례



▲ 교통 민원 점검



▲ 사망사고 현장 점검



▲ 어린이날 홍보



▲ 전광판 설치 홍보



## 2 사회적 약자 보호

### 1.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2020년 쏘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법령 등 제도가 강화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고, 경찰관서에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이 확대되어 더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학대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학대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를 위원회 1호 시책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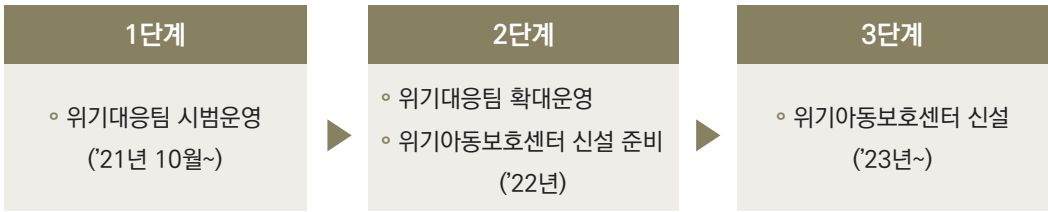
보호체계 계획은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되며, 1단계('21년~'22년) '위기대응팀'은, APO(학대예방경찰관)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근무를 하며, 기존 기관별로 보유한 아동학대 정보를 공유하여 아동학대 관련 공동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와 의정부시에서 우선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 북부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다. 위기대응팀 운영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학대아동에 대한 조기개입과 신속한 피해지원이 가능해짐은 물론, 기관 간 합동 근무를 통해 견고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통합사례 회의, 합동 전수점검 등 공동 수행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2단계('22년~'23년)는, 「위기아동보호센터」 1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위기아동 보호센터」는 위기대응팀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지자체-민간 상설 합동근무, △위기아동 조기발견체계 가동, △유관기관 상시 합동점검을 통한 재학대 방지, △시설 연계 등 학대피해를 입은 위기아동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1년 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었다.

\*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각 1억원 교부, 경기북부·대전 위원회는 우수사례로 2억원 교부

##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 남양주남부경찰서 '위기대응팀' 현장 방문



대상지 확보를 위해 위원장, 사무국장이 경기북부 각 시군 단체장을 면담하였고, 자치경찰협력과장 등 실무자는 해당 시군의 국장 등 관계자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파주시가 센터 설치를 희망하여 '22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3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사무실 리모델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위기아동보호센터가 완성되면 운영과 성과평가 등을 통해 '보호센터'를 경기북부 쏠 지역으로 확대하는 3단계('24년 이후)를 추진하며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는 아동학대 관련 각 기관의 유기적인 공동대응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업무협약 체결



## 위기아동보호센터(파주)

- (시 설 명) <sup>가칭</sup>위기아동 보호센터
- (장 소) 파주시 금촌동 770-1(덕우빌딩 4층)
- (주요기능) 경찰-지자체-민간 상설 합동근무, 학대아동 보호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 (운영시기) '23년 10월 (예정) ※ '23년 상반기 리모델링 공사 등 개소 준비
- (총사업비) 200백만원 (특별교부세 100%)

## 2. 스토킹 STOP!! 지능형 홈CCTV 구축

**지능형 홈CCTV**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비율이 여성이 높고 연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다수 발생하며 장기간 지속되기도 한다. 2021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등 스토킹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법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며, 스토킹 행위의 개념과 범죄유형이 법제화되어 경찰력 개입이 가능해졌고, 스토킹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점차 시행되기 시작했다.

경찰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스토킹 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인력 증원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대부분 관서에서 타 업무와 겸직을 하는 등 전담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업무에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1인 가구가 다수인 스토킹 범죄피해자의 특성상, 주거지 순찰과 CCTV 지원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경찰청 지원 CCTV 모델의 경우 설치조건 등 제약사항이 있어 실제 지원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22년 7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업무협약(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DB손해보험)을 체결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강력범죄 노출 우려가 있는 사회적 약자 200명에게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지능형 홈CCTV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능형 홈CCTV는 무선인터넷을 활용하여 현관 등 건물 손상 없이 설치할 수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임차인이 설치 가능하며, 휴대폰 어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등 설치 및 활용이 편리하여 신청률이 매우 높았다.

## 지능형 홈 CCTV



▲ CCTV 기기



▲ 현관문 설치(거치형)



▲ 휴대전화 전용 앱 연동

업무협약을 통한 지능형 홈CCTV 사업은 스토킹 범죄 예방에는 탁월한 사업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사업예산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홈 CCTV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마침내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23년 하반기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지능형 홈 CCTV가 지원되어, 스토킹 피해자 등 강력범죄 노출 우려 대상자 주거지에 설치되어 범죄위험 사전 감지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할 계획이다.

### 「지능형 홈CCTV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경기북부지역 스토킹 등 범죄 피해 대상자(112신고 이력 등 참고하여 결정)
- (지원내용) 주거지 현관 앞 지능형 CCTV 설치 및 무인경비 출동 서비스
- (운영기간) '23. 5월~
- (총사업비) 150백만원(특별교부세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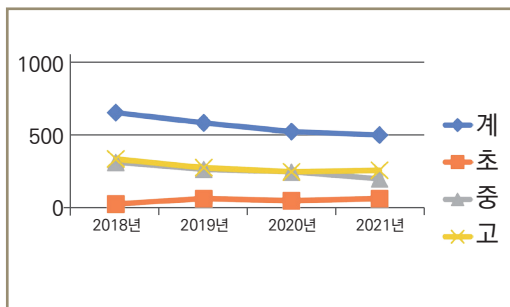
### 3. 어린이폴리스 운영

**학교폭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폴리스 운영** 학교폭력은 최근 뉴스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도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최근 4년간 학교폭력 통계를 보면 2018년 647명, 2019년 576명, 2020년 516명, 2021년 493명이 검거되어 4년간 24%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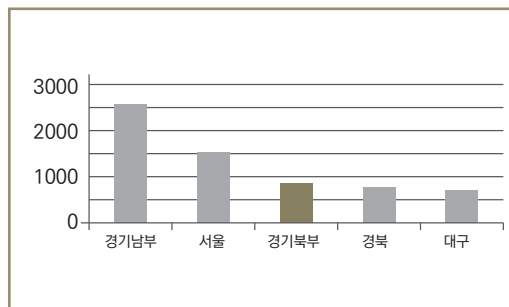
그러나 초·중·고별 통계상 동 기간 경기북부 초등학교 학교폭력 검거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21년 54건으로 217% 증가하였다. 전체 학교폭력에서 초등학생의 비중이 적은 수준이나, 중고생의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초등학생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경찰청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2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를 살펴보면, 경기북부는 3년 평균 851명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민식이 법’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사고 등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높은 실정이다.

학교폭력 검거 및 12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 통계



▲ 경기북부경찰청 학교폭력 검거



▲ 12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도로교통공단 TAAS)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위원회는 어린이들을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어린이폴리스 사업은 비영리 전문 기관의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을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 과정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교통안전교육, 경찰활동 체험으로 구성하였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육은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어린이 스스로 학교폭력을 억제·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1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발생 빈도가

높은 언어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 위주로 교육 내용을 편성하였다.

교통안전 교육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교통법규와 사고방지 대책을 교육하였으며, 한탄강 어린이 교통랜드와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찰활동 체험은 청소년 경찰학교와 연계하여 경찰 역할교육, 실용적인 자치경찰 홍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과학수사, 시뮬레이션 사격과 같은 체험활동으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어린이폴리스 체험형 교육



### 3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1.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 개선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 개선** 2021년 9월 경기도북부자치경찰 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 및 도민참여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코로나로 등교가 급감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7월까지)
전체(어린이)	53(25)	63(23)	91(33)	83(24)	5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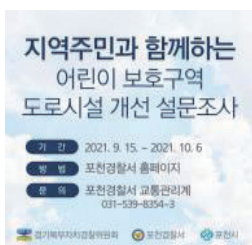
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총 1,055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도로안전시설 개선을 진행하였다. 자치경찰제 시행 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 달에 걸쳐 어린이,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 청취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경기북부경찰청과 13개 경찰서, 경기도와 10개 시·군, 경기도북부교육청과 초등학교,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였다.

관련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기 관	내 용
경기도북부교육청	· 대상시설에 취지/신고기간방법 등 학교 등에 협조공문 발송
초등학교, 특수학교	· 학생생문지, 교통봉사단체·교사·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취합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 시설주, 교사, 학원버스 운전자 등 의견 제출
도로교통공단	· 주민합동점검·결산현장점검·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전문컨설팅팀 참여
자치단체	· 주민합동점검·결산현장점검·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참여 및 시설물 설치
경찰서	· 사전 홍보활동 및 민원 관리 · 교통안전심의회·주민합동점검·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결산현장점검 참여

초등학교 주변 시인성 좋은 곳에 플래카드와 배너를 설치하고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교육청·경찰서 홈페이지, 지역 맘카페, VMS, BIS 등을 통해 도로안전시설 개선 관련 홍보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 학부모, 시설관계자, 교통봉사단체 등 총 3,140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교통시설 개선과 관련된 주민 의견 총 2,730건을 사업에 반영하였다.

### 도민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



▲ 홈페이지



▲ 플래카드



▲ VMS



▲ 맘카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점검,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개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235대, 이동식 단속부스 3대, 노란색 신호등 121개소, 속도하향 20개 구간, 노면표시 274개, 교통안전 표지판 379개, 유색포장 74개, 안전펜스 38개, 과속방지턱 21개 등 총 1,751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이후 설치공사 등은 관련 시·군과 협력하면서 1,751개의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갔다.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



▲ 주민합동점검



▲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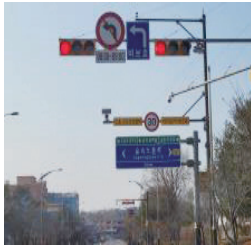


▲ 주민보고회

## 도로안전시설 개선과제

총계	무인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부스	노란색 신호등	속도하향	신호체계	노면표시	교통안전 표지판
1,751	235대	3대	121개소	20개 구간	246개소	274개	379개
	유색포장	안전펜스	(간이)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보도정비	기 타	
	74	38	29	21	21	290	

## 시설개선



▲ 무인단속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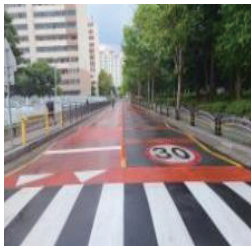
▲ 발광형 통합표지판



▲ 노란색 신호등



▲ 노면 재도색



▲ 유색포장



▲ 안전펜스



▲ 간이 중앙분리대



▲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개선 결과, 경기북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 교통사고는 10.7% 감소 추세를 보이며 사업의 효과를 나타냈다. 자치경찰제 출범 후 교통 분야 첫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도로의 실제 이용자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합동 현장점검 등 개선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지방행정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개선으로 ‘官 → 民 분위로의 시각 전환’ 계기를 마련하였다.

## 도로안전시설 개선 후 교통사고 증감률

구 분	쏴 기간(1.1~12.31)	추진 전(1.1~8.31)	추진 후(9.1~12.31)
2021년	88	63	25
2020년	83	55	28
교통사고 증감률	5(+6.0%)	8(+14.5%)	-3(-10.7%)



## 2. 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교통환경 개선

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교통환경 개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예방적 교통환경설계 (TAPTED: Traffic Accident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적용한 과학적 교통환경 개선방식을 도입·추진하였다.

Q-GIS(지리정보시스템),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을 선정하였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집중도가 높은 우선 대상지 13개 블록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선정된 13개 블록의 면적은 경기북부의 0.44%에 불과하나 교통사고 비중은 14.1%를 차지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였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분석 1단계 - Q-GIS	분석 2단계 - TAAS	분석 3단계 - TCS
사고 다발지점의 집중 분포도를 시각적으로 확인	집중분포 지역에 반복적 확인과 사고별 개략적인 개요를 확인	Q-GIS와 TAAS 상 공통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내역 확인



### 13개 블록 교통사고 비중

구 분	13개 블록	경기북부	점유율
면 적	18.59km <sup>2</sup>	4,268km <sup>2</sup>	0.44%
교통사고	5,298건	37,528건	14.1%
사망자	38명	499명	7.6%

사업의 완성도를 위하여 경찰, 지자체, 교통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회의 및 수시 현장점검을 추진하였다. 교통환경 개선과정에서 선진화된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예방적 교통환경 설계 4대 원리

#### 기본 4대 원리(교통정온화\* 기법 투영)

\* 차량속도와 교통량을 줄여 도로 이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생활권을 보호하는 것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현수막, 경찰서 홈페이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주민 합동점검을 통해 설계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개선과제 734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 중 도로 구조 개선이나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장기과제로 분류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였고, 단기 과제는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처리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해결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전체 734과제 중 725개(98.8%) 과제를 완료하였다.

## 주요 시설물 개선 현황

신호관련	바닥 신호등	무인 단속장비	횡단보도 신설 (대각선 포함)	보행안전 로그젝터	보차도구분 펜스	일반(발광형) 표지 신설정비	투광등/감응식 좌회전	(간이)중앙 분리대
179	35	23	14	17	7	160	43	14



주요 개선사례로는 가평군 가평오거리 진행차로 개선과 구리시 이문안저수지 앞 보행환경 개선이 있다. 국도46호 노선에 위치한 가평오거리는 직진차로가 갑자기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되는 등 비합리적인 차로 운영으로 운전자의 혼동을 초래하여 주말 상습 정체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총 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이었다. 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가평오거리 블록을 노면 색깔유도선 표시를 통해 주도로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하였고, 양보 노면표시, 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 추가 등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구리시 이문안저수지 앞 도로는 주택 밀집 지역으로 상습적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보행자 사고위험이 있었으나 ‘S’자 도로선형 개선(안전지대 및 도로규제봉 설치)과 단속을 병행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개선하였다.

## 주요 교통환경 개선사례

### 가평오거리 진행차로 개선

#### 개선 전



진행차로 혼선으로  
접촉사고 빈발

#### 개선 후



명확한 진행차로 확보

### 구리 이문안저수지 앞 보행환경 개선

#### 개선 전



상습 불법 주차차 차량 다량  
보행사고 위험 상존

#### 개선 후



‘S’자 도로선형 개선으로 보행자 안전확보  
(안전지대 및 도로규제봉 설치)

교통환경 개선 결과 경기북부 13개 블록의 교통사고는 과거 3년간 동기간 평균 대비 14.3%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도 각각 20%, 23.3% 감소하는 등 사고 치명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개선 이후에도 ‘주민현장 평가회’를 통해 사업추진 결과 및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주민참여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였다.

### 교통환경 개선 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중상자 수 증감률

구 분	추진 후(3월 ~ 11월)	추진 전('19 ~ '21년, 동기간 평균)
교통사고(건)	1,133건(14.3% ↓)	1,322건
사망자(명)	8명(20% ↓)	10명
중상자(명)	252명(23.3% ↓)	328.7명

교통사고 많은 블록 교통환경 개선추진 중 2022년 7월 12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모든 차량에 부과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규정을 쉽게 인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공모에 LED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였다.

그 후 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및 13개 경찰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였고 사업의 효과성, 확대가능성, 예산집행 등 주요 절차를 고려하여 의정부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에서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28개소 내 32개의 LED 일시정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LED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시인성 또한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한 층 더 높였다. 앞으로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생활밀착형 홍보활동, 교통경찰 계도 및 단속 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대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 개정(22.7.12.)



## 의정부시 표지판 설치장소



## 표지판 설치 사례



▲ 설치 전(희망학교)



▲ 설치 후



▲ 야간 점등 상태



▲ 설치 전(솔외초)



▲ 설치 후



▲ 야간 점등 상태



### 3.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추진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추진** 2023년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감소하였던 외부 활동이 크게 늘면서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경기북부 전체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 보행자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고령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및 도로안전시설 개선 등 고령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을 방문하여 생활지원사를 통한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경기북부경찰청과 13개 경찰서는 생활지원사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순회 교육을 추진 중이며, 이후 교육역량을 강화한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 등 취약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교통안전 지킴이’로서 교통사고 사례 및 어르신 안전보행수칙 알림 등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 생활지원사 교통안전 역량강화 교육



#### 2023년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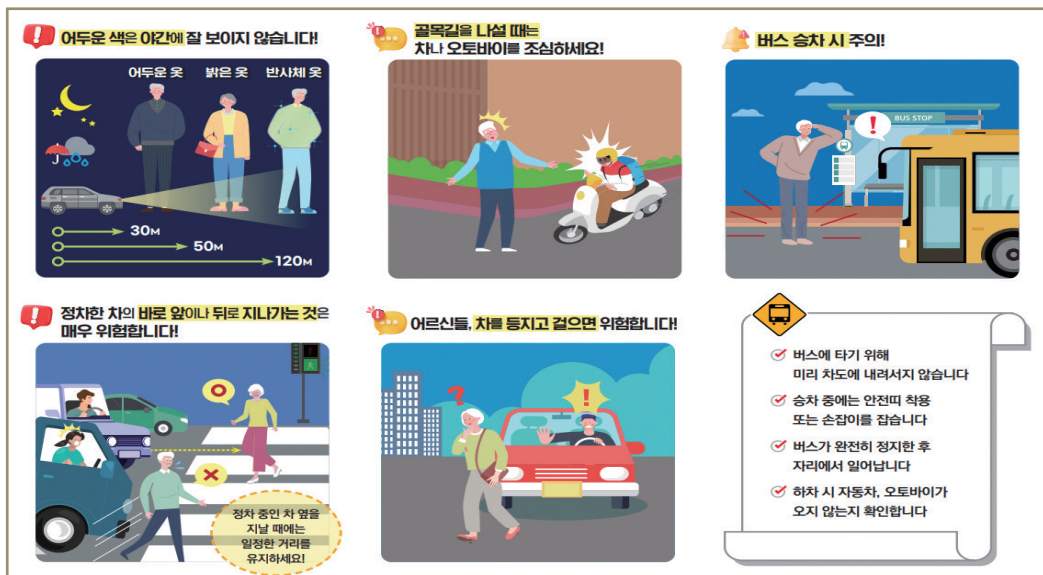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지원사 대상 전수 교육(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 33개소)</li> <li>• 경기북부 고령자 교통안전협의회 등 실무 TF구성</li> <li>•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정책 브랜드, 캐치프레이즈 제작</li> <li>• 고령자 교통안전 소책자·홍보물품 제작</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생활지원사 선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li> <li>• 추진과제 효과분석 및 피드백·미비점 등 개선 보완(주민홍보, 언론보도 등)</li> </ul>
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콘텐츠·교육자료 제작·제공(소식지, 홍보영상 등)</li> <li>• 고령자 교통안전협의회 실무 TF 지속 운영</li> <li>• 생활지원사 지속 교육으로 교육역량 향상</li> </ul>

또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동시에 맞춤형 도로안전시설 개선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경찰청,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였고 현장점검 및 현장컨설팅을 통해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내 각종 도로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야간 시인성 강화 및 보행 안전 시설물 확충과 함께 지자체와 협업하여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고령자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도 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생활지원사를 통한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및 고령자를 배려하는 시설개선을 통하여 도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교육 리플릿 제작



## 4 감사평가 및 청렴인권

### 1. 자치경찰사무 감사

**자치경찰사무 감사**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감사절차,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징계 요구 등을 담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2021.9.30. 시행)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업무 기반을 마련하였다. 감사 규정 제정으로 감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고양·포천·가평경찰서 및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022년 의정부·구리·일산동부·동두천경찰서, 2023년 상반기 남양주남부·양주경찰서 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하반기 남양주북부·일산서부경찰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도별 감사대상기관 현황

연 도	감사대상 기관
2021년	고양경찰서, 포천경찰서, 가평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2022년	의정부경찰서, 구리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동두천경찰서
2023년	남양주남부경찰서, 양주경찰서, (하반기 예정) 남양주북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주요 감사내용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주요 시책 및 중점 추진 과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적법성, 투명성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중 사회적 현안 또는 취약분야 전반을 확인하여 감사 항목을 2021년 3개에서 2023년 1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불합리한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다발구역 시설개선 후 교통사고 감소’, ‘학대범죄 통합 피해자 보호지원 다국어 안내서 제작’ 등 우수 사례 10건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에 전파하는 등 적극 행정을 장려하였으며,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유공이 있는 총 19명에 대해서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 감사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2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처음으로 지원된 복지포인트 운영실태를 사업추진 기간 내 감사하여, 착오 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전 컨설팅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생활 밀착 치안 시책 등 도민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 분야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 발생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자치경찰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종합감사 추진



▲ 경기북부경찰청 종합감사



▲ 가평경찰서 종합감사



▲ 구리경찰서 종합감사



## 2.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경찰서장 평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13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평가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위원회 의결 시책 및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와 연계하여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정성·정량 혼합방식으로 평가하였다.

2021년 11월에 시작된 경찰서장 사무수행 평가는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부 등의 의견을 기반으로 지표를 마련하였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평가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였다.

2022년도 평가에는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효적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성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20%→40%)하여 계량화하기 어려운 각 급지별 치안수요를 고려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 시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수립 여부뿐만 아니라 집행과정까지도 살펴보고 자치경찰사무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2023년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평가는 등급별 배점기준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경찰청 치안종합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위원회는 등급별 배점 격차를 확대(3점~2.4점 → 3점~2.1점)하여 자치경찰사무 평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치경찰사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 경찰서장 평가



또한, 경기북부경찰청 치안종합 성과평가의 성과과제 평가 시 ‘자치경찰분야 자율지표 정성평가’에 대한 외부위원 비중을 50%로 확대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는 「경찰청 치안종합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 경찰서장 평가 중 책임지휘 역량평가에 30% 반영되며, 매우우수 3개서는 S등급, 우수 5개서는 A등급, 보통 4개서는 B등급, 미흡한 1개서는 C등급이 부여 되었다. 2023년에는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일선 경찰관서에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및 각 경찰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평가로 인한 피로도를 개선하여 평가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023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3개 (총3점)	4개	3점(100%)
1. 정책추진의 노력도 (0.9점)	1) 위원회 시책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0.9점(30%)
2. 목표 달성도 및 정책 효과성 (1.5점)	1) 위원회 시책에 대한 경찰서장 이행 적극성(협업도) 및 성과 달성도 ※ 위원회 위원 정성평가	1.2점(40%)
	2)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 환류 노력도	0.3점(10%)
3. 정책홍보 (0.6점)	1)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0.6점(20%)



### 3. 인권 보호 및 자치경찰 청렴도 향상

**인권 보호 및 청렴도 향상**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및 도민 인권 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자치경찰 청렴도 향상 및 인권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위원회는 2022년 7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남양주남부·양주·가평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현장인권 진단을 실시했다. 인권 자문위원(위원회 정책자문단 및 도인권담당관 자문단)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인권진단 항목을 선정하고, 자치경찰 분야 인권침해요소 점검 및 가평군청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과 연계한 고위험 학대 우려 아동유관기관 합동지원 등 총 3건의 인권 보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도민인권보장 향상을 도모했다.

#### 인권진단



또한, 위원회는 2022년 9월 자치경찰사무 담당자 및 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하였고, 2023년 4월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청렴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소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구체적 사례 설명을 바탕으로 공직자 청렴 인식방향성을 제시하고,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시의성 있는 분야의 사례 공유를 통해 인권보장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인권 의식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및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도민 인권 보호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홍보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리플릿, 사례집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홈페이지 ‘인권 더하기’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게시를 통해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청렴인권 정책 홍보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의식 강화 및 인권 지향성을 높여 자치경찰사무 수행 현장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자치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한다.

## 5 인사 및 교육

### 1. 임용권 행사

**임용권**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를 제외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하 경찰관에 대한 임용권이 경찰청장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도지사가 임용권을 갖는 경위/경감으로의 승진을 제외한 임용권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재위임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두 개의 시·도경찰청이 존재하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었는데, 두 위원회는 비록 법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같은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여 임용권의 행사범위에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자치경찰제를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임용권을 모두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징계 등 시급을 요하는 임용권의 행사는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재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1.9.10. 임시회의를 통해 승진임용 전체와 전보 중 주요 직위인 도경찰청의 계장급과 경찰서의 과장급에 대한 임용권을 위원회가 직접 행사하고, 향후 필요시 도경찰청장에 재위임한 임용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였다.

경정이하 자치사무 경찰관 임용권한

---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한 범위

임용 계급	신규 채용	면직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 해제	복직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경정	대통령			자치경찰 위원회	도경찰청장 위임				경찰청장			
경감	경찰청장			도지사								
경위												
경사				자치경찰 위원회								
경장				경찰서장 위임								
순경												

▶ 임용권 행사 :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 경정·경감(廳 계·팀장 및 뿔 과장급) 전보

승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장/경사로의 승진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로 행사하고, 경위/경감으로의 승진은 도지사(경기도 자치행정과 주관)가 행사하고 있다.

경찰관의 승진임용식은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부터 사기진작을 위한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던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에 대한 승진임용식을 개최하여 자치경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승진임용식은 승진유형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특별승진의 경우 연 1회(12월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개최하고, 근속/심사/시험승진의 경우 승진대상자 발생시 경찰서로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출범 이후 위원회는 경장/경사로의 승진 총 209명, 도지사는 경위/경감으로의 승진 122명에 대해 임용권을 행사하여 총 331명의 자치경찰을 승진임용하였다.

## 승진임용식 개최



▲ 찾아가는 자치경찰 승진임용식  
(23.4.6. 포천경찰서)

## 승진임용식 개최 방식

구 분	자치경찰위원회 승진임용식	찾아가는 승진임용식
승진유형	특별승진	근속/심사/시험승진
시기	매년 1회(12월 말)	수시(승진자 발생시)
장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경찰서

## 계급별 자치경찰 승진임용 현황

단위 : 명 / 2023년 6월말 기준

구분	합계	자치경찰위원회 임용			도지사 임용		
		소계	순경 → 경장	경장 → 경사	소계	경사 → 경위	경위 → 경감
합계	331	209	147	62	122	52	70
2021년	41	33	31	2	8	8	-
2022년	165	103	69	34	62	22	40
2023년	125	73	47	26	52	22	30

전보 도경찰청의 계장급과 경찰서의 과장급은 위원회에서 직접 전보임용하고 도경찰청의

실무자와 경찰서의 계장급 이하는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였다. 모든 전보임용에 대해 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주요 보직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관별 실무자 보직은 해당 기관에 재위임하여 일부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위원회 출범 이후 총 31명(도경찰청장 계장급 7명, 경찰서 과장급 24명)에 대한 전보임용을 실시하였다.

## 전보임용 현황

단위 : 명 / 2023년 6월말 기준

구 분	합계	도경찰청 계장급	경찰서 과장급
합계	31	7	24
2021년	0	-	-
2022년	14	3	11
2023년	17	4	13

**지역경찰관서장(지구대/파출소장) 보직 의견 제시**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지구대·파출소장을 보직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9항),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통해 지구대/파출소장 보직별 후보자에 대해 추천순위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제7차 정기회의(‘21.8.26.) 때 ‘지구대·파출소장 보직 사전의견 제시 운영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의견 제시 시점에 대해 경찰관서 보직심사위원회 이후에 할지(1안) 이전에 할지(2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보직심사위원회에서 먼저 후보자 검증을 한 뒤에 걸러진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1안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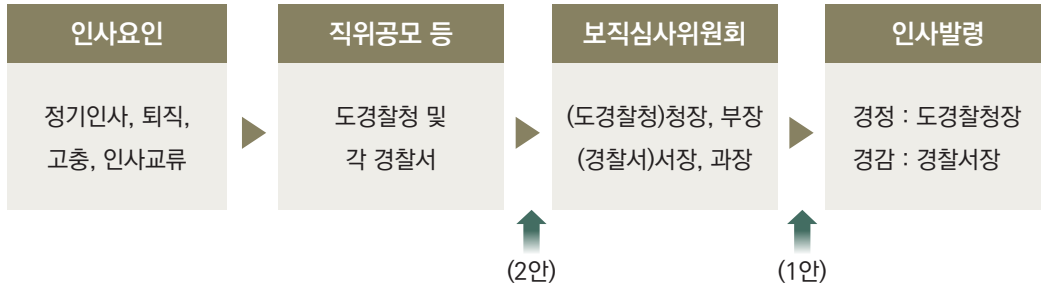
한편, 위원회는 여러차례의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 추천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 퇴직이 임박한 자는 가급적 제외하며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50조(대민접점부서의 부적격자 배제)에 해당되는 3대 비위자(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는 보직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주민과 최접점에서 활동하는 지구대/파출소의 역할에 주목한 것이다.

다만, 법령상 지구대/파출소는 위원회 임용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위원회의 보직의견 제시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임용권자(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가 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이원화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으나, 현재의 일원화 체제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기관 간에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 속한 13개 경찰서에는 총 101개의 지역경찰관서(지구대 33, 파출소

68)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2023년 6월말까지 총 158개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지구대장 48, 파출소장 110).

###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의견 제시 운영계획(안)



### 경기북부 지역경찰관서 현황

※ '23.2.6.개정 「경기도북부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경찰서	합계	지구대	파출소
합계	101	33	68
의정부	6	금오, 신곡, 기능, 송산, 호원, 녹양	-
고양	9	화정, 원당, 행신, 신도, 도래울	고양, 관산, 화전, 행신3
일산동부	4	마두, 백석, 중산	풍사
일산서부	5	탄현, 대화, 주엽	가좌, 일산
남양주남부	10	화도, 다산2	금곡, 와부, 호평, 다산1, 평내, 수동, 조안, 천마
남양주북부	7	-	진접, 퇴계원, 오남, 진건, 청학, 해밀, 별내
파주	13	금촌, 운정야당, 운정호수, 문산	월롱, 교하, 파평, 조리, 탄현, 파주, 법원, 광탄, 적성
양주	10	회천, 고읍, 덕계, 옥정	주내, 장흥, 광적, 백석, 은현, 남면
동두천	5	송내	생연, 광암, 소요, 중앙
구리	5	교문, 토평, 인창, 갈매	수택
포천	14	소흘	포천, 선단, 신북, 영중, 영북, 관인, 일동, 이동, 화현, 가산, 내촌, 군내, 창수
가평	6	-	읍내, 북면, 청평, 상면, 조종, 설악
연천	7	-	전곡, 청산, 연천, 신서, 군남, 왕징, 백학

## 지역경찰관서장 보직의견 제시 현황

단위 : 보직 수 / 2023년 6월말 기준

구분	합계	지구대장	파출소장
합계	158	48	110
2021년	5	1	4
2022년	94	26	68
2023년	59	21	38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법령상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 경찰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 직접 승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불완전한 임용권에 머물고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통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2명의 위원을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방식의 간접적인 승진권한만 갖고 있을 뿐이어서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내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2명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로써 심사/근속/특별승진 등 승진유형별로 추천방법을 세분화하였다.

심사승진의 경우 도경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경무관 계급인 점과 심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타 시·도와 달리 총경 계급으로 추천하고,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이 경정 계급이므로 경감 이상 계급으로 추천토록 하여 자치경찰이 승진심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거의 매월 진행되는 근속승진의 경우 도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는 경정 이상 계급으로,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는 경위 이상 계급으로 순서를 지정한 추천위원 후보자명부를 반기별로 일괄 추천하도록 하였다.

기존에 정기특진만 있던 특별승진이 '23년부터 정기/공약/수시\*특진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정기특진 '공적심사위원회'에는 위원 2명(자치부서 총경 1명, 경찰서장 1명)을 추천하고, 정기/공약/수시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승진후보자에 대해 승진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는 행정적 절차만 담당하고 있어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후보자 명부에서 순번대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 정기특진 : 최근 1년 동안 누적 공적이 우수한 직원 특진

공약특진 : 각 기능별 중점과제 유공자 특진

수시특진 :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사건을 해결한 유공자 특진

**인사운영지침 제정** 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근거가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등 여러 법령에 걸쳐 분산되어 있고, 위원회에서도 ‘승진심사위원 추천계획’,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의견 제시 운영계획’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다 보니, 향후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변경 등에 대비하여 하나의 규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사운영 지침 제정을 추진하였다.

인사운영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가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있어, 지침에 “자치경찰사무 비중이 과반인 자”로 정하여 규정의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임용권 행사와 위임의 범위를 정하였고, 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한 임용권에 대하여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위임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위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위임 임용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도경찰청장에게 추천/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경찰청장 추천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을 지양하여 위원회의 임용권 행사가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하였다.

**찾아가는 인사업무 간담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인사운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경찰서 간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서 인사담당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인사업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위원회 북부자치경찰인사팀에서는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임명 시 자치경찰위원들의 방침(강조사항)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여 경찰서의 협조를 구하였고, 경찰서측은 주로 교육/표창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에 가평에서 운영하던 힐링교육이 원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고양/파주권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당장 올해부터 서부권(고양/파주)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파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향후 경찰관서 인사담당자들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인사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 찾아가는 인사업무 간담회



## 찾아가는 인사업무 간담회 개최현황(총 24회)

연 도	일 시	장 소
2022 (11회)	1. 11.	포천경찰서, 가평경찰서
	1. 12.	구리경찰서, 남양주북부경찰서
	1. 21.	연천경찰서, 동두천경찰서, 양주경찰서
	1. 26.	파주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고양경찰서
2023 (13회)	3. 7.	구리경찰서, 의정부경찰서
	3. 8.	양주경찰서, 동두천경찰서, 연천경찰서
	3. 9.	포천경찰서, 가평경찰서
	3. 14.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3. 15.	고양경찰서, 파주경찰서
	3. 16.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북부경찰서



## 2. 교육 및 포상

**교육**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부서(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로 인사발령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행정·치안행정 융합 등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실시하였다. 또한, 교대근무, 악성민원 대응 등 격무로 인한 자치경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힐링교육’을 특색있게 운영하고 있다.

역량강화 교육의 경우, 2023년부터 자치부서 사업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지방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 담당자들의 예산/회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치경찰 제도가 신속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치부서 신규 배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취지·목적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특히 '22년 개최한 자치경찰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회장이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신현기 위원장이 ‘자치경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강의를 맡아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힐링교육은 가평군 소재 도립 ‘잣향기푸른숲’에서 전문강사의 도움으로 명상 등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찾아가는 인사업무 간담회에서 고양/파주 권역 근무자들은 원거리 이동이 부담된다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3년부터는 서부권(고양/파주)은 파주 ‘울곡수목원’에서 별도로 추진하였다.

위원회 출범 후 역량강화교육은 7회에 걸쳐 총 245명을 교육하였고, 힐링교육은 27회에 걸쳐 총 371명을 교육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향후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더 좋은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도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육을 지정학습\*에 반영함으로써 교육효과뿐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시간 이수에 반영토록 하는 등 혜택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교육



\* 지정학습 : 국정철학·경찰핵심가치 등 공직관·전문 직무역량 함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경정 이하는 연간 90시간의 상시학습 중 70% 이상의 지정학습 필수)

## 교육운영 현황

2023년 6월말 기준

구분	합계(교육인원)	역량강화 교육		힐링교육	
		운영횟수	인원	운영횟수	인원
합계	616	7	245	27	371
2021년	0	-	-	-	-
2022년	304	3	99	15	205
2023년	312	4	146	12	166

## 역량강화교육 추진실적

구분	회계실무분야	자치경찰제도 분야	물품관리분야
일시	3.24.(금)	6.21.(수), 6.30.(금)	6.29.(목)
장소	실시간 온라인(ZOOM 활용)	의정부서 / 남양주북부서	의정부시청 전산교육장
대상	경찰청(서) 회계담당자	경감이하 자치부서 전보자	경찰청(서) 물품담당자
인원	42명	67명	37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지출 등 일반회계 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경찰의 현재와 미래</li> <li>경기북부형 자치경찰제 현황 (예산, 감사, 인사 등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품취득·처리요령 등 물품관리과정</li> </ul>

**포상**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법」 제24조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사기진작’을 근거로 ’21.9.30.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포상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자치경찰위원회 명의(훈격)로 총 1,768점의 포상(표창장 1,589점, 감사장 174점, 상장 5점)을 수여하였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된다.

표창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장기간 근무하면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범인을 검거하거나, 신고 또는

## 포상 수여식



제보로 중요범인을 검거하게 하여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경우, ▲자신을 희생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등 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등 자치경찰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수여한다.

감사장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자치경찰의 명예를 높이거나 ▲그 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자치경찰 및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 아닌 자(단체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상장은 위원회에서 주관·후원하는 교육 및 경기·경연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적정한 포상 규모 운영을 위해 계획포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의 경우 포상 상점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요소인 만큼 「경찰 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도경찰청장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기존 포상제도와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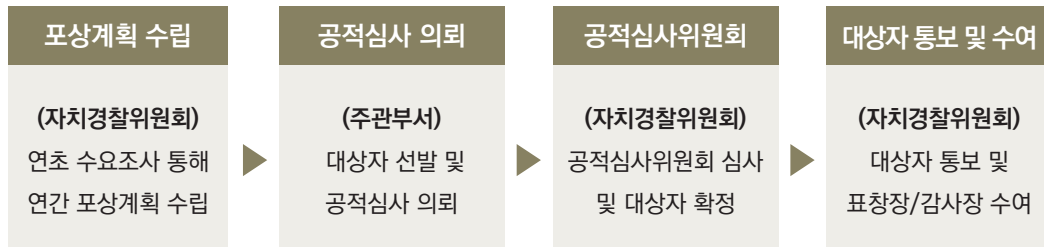
이에 따라 연간 포상 규모는 표창장의 경우 자치경찰사무 수행공무원(자치사무담당 경찰공무원 + 지구대·파출소)의 약 25% 이하로, 감사장은 10% 이하를 기준으로 삼아 '23년도에는 연간 970점의 표창장과 390점의 감사장을 포상 규모로 정하였다.

다만, 주요비위\* 관련 포상배제 기준에 있어서는 경기도 「도지사 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주요비위 징계사항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이 불가하도록 위원회 포상규정에 명시함으로써 경찰청의 포상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 주요비위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성매매/성희롱범죄,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상 시기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기는 자치경찰 출범일(7월 1일) / 경찰의 날(10월 21일) / 연말(12월 31일)에, 수시의 경우 수요조사를 통한 연간 계획포상에 따라 매월 운영하고 있다.

### 수시포상 진행절차



## 포상 수여 현황

2023년 6월말 기준

구분	합계	표창장	감사장	상장
합계	1,768	1,589	174	5
2021년	488	488	-	-
2022년	891	775	111	5
2023년	389	326	63	-



## 6 사기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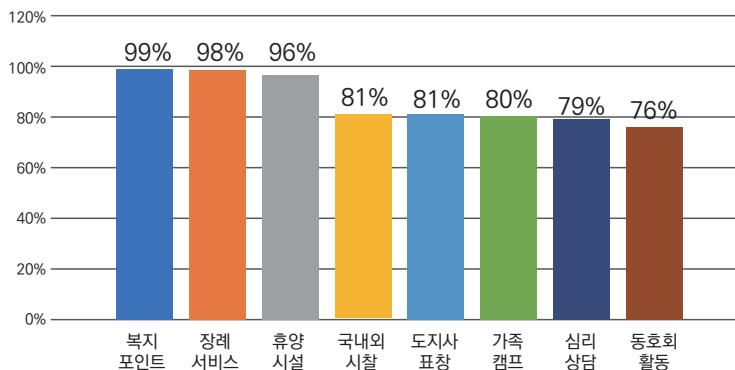
### 1.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복지포인트 지원

**복지포인트 지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초기 경기도에 대한 자치경찰의 소속감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통한 도민 체감형 치안시책 구현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자치경찰 공무원은 최일선 현장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소방직·일반직 공무원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이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에 앞서 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와 「경찰법」 제35조 및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개선 등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자치경찰 처우개선 설문조사

- (설문기간) '21.7.29. ~ 8.4.(7일)
- (설문결과) 북부자치경찰 공무원 998명 중 833명이 답변 (응답률 83.5%)
- 필요성 분석결과, 복지포인트 > 장례서비스 > 휴양시설 > 국내외시찰 > 가족캠프 등 순서임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및 자치경찰사무 담당 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직 등의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임용권 외의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였다. 다만, 위의 대상자가 위원회 임용권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과 경기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과는 지원금액에 일정한 차등을 주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경찰서 자치경찰부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자 1,000명에게 연 최대 100만원,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및 자치경찰사무 담당 일반직·무기계약직 등 2,700명에게는 연 최대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22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24억원의 예산을 확보·지급하였고, '23년도에는 8,200만원 증액된 24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배정된 복지포인트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들이 사용하는 경찰복지포털 폴복지에서 '자치경찰·국가경찰 포인트'의 통합사용이 가능하도록 경찰청 등과 협의·구축하여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 2.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감정소진 및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자치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증진하고 격무에 지친 경찰관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북부 자치경찰과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이며, 복지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체험은 수도권 내 문화탐방이나 가족친화적 장소에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2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24,000천원을 확보하여 총 89명의 경찰관을 포함한 324명의 가족을 지원하였다.

'22년 사업대상지는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용인 에버랜드, 양평 용문사세미원 등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들이 모두 선호할 만한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2년 가족체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체험자들은 98%의 높은 종합 만족도 (설문항목 ▲콘텐츠 ▲진행방식 ▲기간/장소)를 나타냈으며, 기타 의견으로 체험횟수 확대 등 지속적인 가족체험 추진을 요청하였다.

### 2022년 가족체험 만족도 조사(87명, 응답율 98%)

- 콘텐츠 (만족이상 100%) : 매우 만족 73명(84%), 만족 14명(16%)
- 진행방식 (만족이상 100%) : 매우 만족 75명(86%), 만족 12명(14%)
- 기간/장소 (만족이상 95%) : 매우 만족 69명(79%), 만족 14명(16%), 보통 4명(5%)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에는 32,4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4회의 가족체험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자도 약 108명의 경찰관을 포함한 400여명으로 확대하였다.

1분기에는 총 97명의 경찰공무원과 가족들에게 놀이공원 이용권을 제공하였으며, 2분기에는 총 116명에게 여름 물놀이장 이용권을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가을 캠핑 체험, 겨울 실내 썰매장 등 직원 선호도가 높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치경찰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가족체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 '22년 6월 가족체험 (가평)



▲ '22년 9월 가족체험 (용인)



▲ '22년 10월 가족체험 (양평)



▲ '23년 봄 가족체험 (서울)



▲ '23년 봄 가족체험 (서울)



▲ '23년 여름 가족체험 (서울)



# 05

## Section 5

### 역량강화 및 소통협력

1. 워크숍 개최
2. 정책연구 추진
3. 간담회 및 현장방문
4.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5.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원탁회의

## Section 5. 역량강화 및 소통협력

###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경기북부

#### 1. 워크숍 개최

2021년 워크숍 '21년 상반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사무국 직원의 업무이해도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과와 함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각 분야별로 자치경찰사무 설명, 질의응답을 통한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 112 치안상황실 견학 등을 진행하였다. 자치경찰 시행의 전환기적 의미,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연계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고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수사,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반기에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 소통체계 구축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한국형 자치경찰의 발전방향, 경기북부자치경찰제 추진방향, 치안행정-자치행정 연계방안,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비전과 전략적 과제, 향후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논의 등 현재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1년 워크숍



▲ 상반기 워크숍('21.6.4. / 경기북부경찰청)



▲ 하반기 워크숍('21.11.18. / 경기도청북부청사)

**2022년 워크숍** '22년에는 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위원-직원 간 상호교류 및 소통체계 구축 등을 위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그간 워크숍이 사무국 내 일반공무원-경찰 간 소통,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면 '22년 워크숍은 사무국 직원뿐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 경찰서장, 파출소장, 외부강사 등 여러 관계자와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위원회의 그간 활동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향후방향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형사사법환경 변화, 자치경찰의 의의, 사례연구 등 자치경찰과 셉테드 특강에 이어 사례 검토 및 적용방안, 대응방안 모색 등을 위한 분임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가평경찰서장(前 자치경찰협력과장)의 <자치경찰 1년, 일선경찰에게 듣다> 특강은 위원회가 그간 추진한 행복마을관리소 협업체계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위원회 위원들, 직원들과 그간 성과와 과오에 대한 소회, 발전방향 논의 등이 있었다. 이후 가평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값진 시간을 공유하였다.

## 2022년 워크숍



▲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위원회  
(가평 원흥리 행복마을관리소)



▲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 특강  
(자치경찰과 셉테드)



▲ 위원-직원간 소통  
(발전방향, 사례검토, 적용방안 등 논의)



▲ 가평경찰서장 특강  
(자치경찰 1년, 일선 경찰에게 듣다)

## 2. 정책연구 추진

**경기도 자치경찰제 비전과 전략 수립**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따라 경기도 자치경찰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道 치안여건 분석을 토대로 한 경기도 자치경찰제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해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연구는 '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내외 자치경찰제 여건 변화 및 전망, 경기도 남·북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환경 분석, 경기도 자치경찰제 비전과 전략의 수립, 자치경찰제 부문별 주요사업, 인사운영 방안 수립, 경찰서장 평가 방향 및 평가지표 발굴, 자치경찰제의 재정 계획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결과는 경기도 자치경찰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업무계획 작성 등에 참고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활용하였다.

### 경기도 자치경찰제 비전과 전략 수립

- (연구기간) '21.8월 ~ 11월
- (연구기관) GRI(경기연구원)
- (연구내용) 경기도 자치경찰제 환경분석, 경기도 자치경찰제 비전과 전략의 수립,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사업 발굴 등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출범 2년차에 접어든 '22년 하반기에는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행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실질적 자치경찰 수요가 발생하는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 청소년, 교통안전 분야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과의 협력에 대한 장치가 부재하여, 자치경찰위원회와 시·군 간 협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협력체계의 개념, 광역단위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협력체계의 특징, 필요성 등 검토, 국내외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간 협력체계 사례연구, 경기도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간 협력체계의 실태와 과제, 경기도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시, 시·군 자율방법대('22.4월 관련법 국회 통과 관련) 연계 및 활용 방안 등이다. 연구에서는 지난 경기북부자치경찰위 1년 성과, 문제점 등 분석, 민선 8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별 치안 특성 및 현황 검토, 맞춤형 협력과제 제시 등을 담았다.

또한 자치경찰관련 기능 및 조직체계를 연구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설물\*과

교통(도로) 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한 시·군-자치경찰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범죄예방시설물 : 가로등, CCTV, 안심벨 등 범죄예방환경 시설물

\*\* 교통안전시설물 : 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등

본 연구는 자치경찰사무가 시·군 단위에서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경기도 자치경찰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가 용이해졌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시·군의 유사사업 조정,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자치경찰-지방행정 간 협력체계 개선방안 모색,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편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

###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 (연구기간) '22.6월 ~ 11월(착수일로부터 5개월)
- (연구기관) GRI(경기연구원)
- (연구내용) 경기도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간 협력체계의 실태와 과제, 경기도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시, 시·군 자율방범대 연계 및 활용 방안 등



### 3. 간담회 및 현장방문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 추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촘촘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2022년도 2월부터 동두천, 가평, 구리시 등 경기북부 10개 전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방문 면담하여 자치경찰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 시책사업인 ‘행복마을 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시·군 및 경찰서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형 모델은 구리시, 농촌형 모델은 가평군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해당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시책사업으로 평가되어 경기북부 전 시·군에 확대·시행되고 있다. 또한, 12월 13일은 파주시청에서 위원회, 파주시, 파주경찰서 3개 기관이 ‘치안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내용에 ‘행복마을관리소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협력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시책사업인 ‘학대아동 보호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위한 「위기아동 보호센터」 설립 추진’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 자치경찰위원회·기초지자체·경찰서 간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구리시-구리경찰서)



▲ 업무협약(가평군-가평경찰서)



▲ 업무협약(동두천시-동두천경찰서)



▲ 업무협약(파주시-파주경찰서)

## 2021년 ~ 2022년 기초지자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군수 간담회

시군명	일자(장소)	시장·군수명	위원회 참석	간담회 주요 내용
고양시	'22.08.19. (고양시청)	이동환	위원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위기아동 보호센터 구축사업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남양주시	'22.11.07. (남양주시청)	주광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위원회 주요 추진사업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파주시	'22.08.29. (파주시청)	김경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위기아동 보호센터 구축사업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22.12.13. (파주시청)	김경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경찰 치안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파주시-파주경찰서)</li> </ul>
의정부시	'21.10.12. (의정부시청)	안병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ul>
	'22.08.25. (의정부시청)	김동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위기아동 보호센터 구축사업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양주시	'22.12.14. (양주시청)	강수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위원회 주요 추진사업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구리시	'22.03.04. (구리시청)	안승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행복마을관리소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22.04.06. (구리시청)	안승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마을 관리소 관련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구리시-구리경찰서)</li> </ul>
	'22.10.13. (구리시청)	백경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위원회 주요 추진사업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포천시	'22.09.16. (포천시청)	백영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위원회 주요 추진사업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동두천시	'22.02.28. (동두천시청)	최용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위기아동 보호센터 구축사업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22.09.14. (동두천시청)	박형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위기아동 보호센터 구축사업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22.10.19. (동두천시청)	박형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경찰 분야 치안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동두천시-동두천경찰서)</li> </ul>
가평군	'22.03.08. (가평군청)	김성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행복마을관리소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22.04.20. (가평군청)	김성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마을 관리소 관련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평군-가평경찰서)</li> </ul>
	'22.12.06. (가평군청)	서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위원회 주요 추진사업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연천군	'22.12.15. (연천군청)	김덕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사업 등 홍보</li> <li>위원회 주요 추진사업 협력방안 논의 등</li> </ul>

※ 경기북부 시·군 순

2021년 ~ 2022년 기초지자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군수 간담회



▲ 주광덕 남양주시장('22.11.7.)



▲ 김경일 파주시장('22.08.29.)



▲ 안병용 의정부시장('21.10.12.)



▲ 강수현 양주시장('22.12.14.)



▲ 안승남 구리시장('22.03.04.)



▲ 백경현 구리시장('22.10.13.)



▲ 백영현 포천시장('22.09.16.)



▲ 최용덕 동두천시장('22.02.28.)



▲ 박형덕 동두천시장('22.09.14.)



▲ 김성기 가평군수('22.03.08.)



▲ 서태원 가평군수('22.12.06.)



▲ 김덕현 연천군수('22.12.15.)

※ 경기북부 시·군·군

또한, 위원회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경기북부 13개 경찰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찰직장협의회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갖는 한편, 추석 등의 명절에도 민생치안 활동에 노고가 많은 지구대·파출소 등 최일선 치안기관을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아울러 민간단체 대표,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 등과의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취합된 74건의 의견을 경기북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도민들과 자치경찰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경기북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에 대한 격려방문을 추진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자치경찰제도 발전 및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치안기관 방문 격려



## 4.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구성·운영** 2021년 7월 1일 역사적인 자치경찰제도 전국 시행 이후, 자치경찰제도 안착과 관련한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원활한 정책협의를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2021년 8월 25일 전국 18명의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이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보다 활발한 정책개발 등을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1인, 총 4인의 부회장을 선정했다(수도·강원권-이병록 인천위원장, 충청권-권희태 충남위원장, 호남·제주권-김태봉 광주위원장, 영남권-최철영 대구위원장). 그리고 협의회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는 협의회장이 속한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맡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도 전국시행 100일이 되는 2021년 10월 7일에는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전원이 대구에 있는 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 모여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기념 컨퍼런스’를 진행하였고, 이어 제1차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을 감사로 선출하였고 협의회 정관을 제정하였으며, 시도별 제출안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매월 1회 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경찰 분야 당면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

제2기 임원진은 2022년 6월 22일, 자치경찰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제8차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구성되었다. 회장에는 김학배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장, 감사에는 남기현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각 권역별로 1인 등 총 4인의 부회장에는 수도·강원권-송승철 강원위원장, 충청권-강영욱 대전위원장, 호남·제주권-이형규 전북위원장, 영남권-김태근 울산위원장을 각각 선정하였다. 임원진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명단

2023. 6. 30. 현재

지자체명	성명	주요약력	비고
서울특별시	김학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li> <li>前 대전·울산지방경찰청장</li> </ul>	제2기 회장
부산광역시	정용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부산경찰청 보안과장</li> <li>前 부산 금정경찰서장</li> </ul>	
대구광역시	설용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대전교통방송사장</li> <li>前 대구경찰청 1·2부장</li> </ul>	
인천광역시	이병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li> <li>前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li> </ul>	
광주광역시	김태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前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li> </ul>	
대전광역시	강영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대전일보사 사장</li> <li>前 법원공무원교육원 원장(차관급)</li> </ul>	
울산광역시	김태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現 울산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li> <li>前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li> </ul>	
세종특별자치시	나승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li> <li>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li> </ul>	
경기북부	신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現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회장</li> <li>前 한세대학교 교무·기획·학생처장</li> </ul>	
경기남부	김덕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대전지방경찰청장</li> <li>前 경찰교육원 원장</li> </ul>	
강원도	송승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강원도립대학교 총장</li> <li>前 한림대학교 부총장</li> </ul>	
충청북도	남기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現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li> <li>前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li> </ul>	
충청남도	권희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선문대학교 특임부총장</li> <li>前 충청남도 정무부지사</li> </ul>	
전라북도	이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전주대 행정대학원 교수</li> <li>前 전라북도 행정·정무부지사</li> </ul>	
전라남도	조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現 국회 입법지원위원('19. ~ 현재)</li> <li>前 국가경찰위원회 위원('17. ~ '20.)</li> </ul>	
경상북도	이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前 대구지방(고등)법원 판사</li> </ul>	
경상남도	김현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現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li> <li>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부의장</li> </ul>	제1기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김용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li> <li>前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li> </ul>	

##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관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명칭과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명칭)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약칭 : 자치경찰위원장회</li></ul></li><li>• (목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li></ul>	제1조 제2조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치경찰제도의 추진과 관련한 공동현안 대응</li><li>•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li><li>• 제도·법령·정책 관련 대정부 의견개진 및 건의</li><li>•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li><li>• 위원회 간 상호교류 및 정보 공유</li><li>•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li></ul>	제3조										
임원 및 임원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임원) 회장 1인, 권역별 부회장 4인, 감사 1인</li><li>• (선출) 회의에서 회원 중 호선</li><li>• (임기) 1년(매년 7. 1. ~ 익년 6. 30.)</li></ul>	제6조 제7조 제8조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기회(반기별 연 2회 개최 원칙) 및 임시회 개최</li><li>• 협의회 사업, 정관 제·개정, 임원 선출, 재정 및 회계,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li></ul>	제10조 제11조 제12조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장이 소속한 위원회 사무국에 지원기구 설치</li><li>• 협의회 사업수행, 위원회 간 연락업무, 협의회 재정 운영 등 실무지원</li><li>• (간사) 회장 소속 위원회의 사무국장</li></ul>	제14조 제15조										
재원 및 회계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협의회 경비는 회원부담금,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 (필요시 특별분담금 징수)</li><li>• (회계연도) 매년 7. 1. ~ 익년 6. 30.</li><li>• (예결산) 회계연도 내 예산편성 및 결산 실시</li></ul>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정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li></ul>	제20조										
별표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권역 분류표</li></ul><table><tr><th>권역명</th><th>해당 위원회</th></tr><tr><td>수도·강원권</td><td>서울, 인천, 경기북, 경기남, 강원</td></tr><tr><td>충청권</td><td>대전, 세종, 충북, 충남</td></tr><tr><td>호남·제주권</td><td>광주, 전북, 전남, 제주</td></tr><tr><td>영남권</td><td>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td></tr></table></div>	권역명	해당 위원회	수도·강원권	서울, 인천, 경기북, 경기남, 강원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제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권역명	해당 위원회											
수도·강원권	서울, 인천, 경기북, 경기남, 강원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제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5.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원탁회의

**사무국장 원탁회의**의 자치경찰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각 시·도는 자체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일선 현장에서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시책들은 소속 사무국 검토를 거쳐 각 시·도 경찰청장에게 전달되는 만큼 중요성이 매우 높았고, 각 사무국에서는 여타 위원회 사무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사무국을 총괄 관리하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주목되고, 각 사무국 간 우호 협력과 각종 중대 현안의 공동대응 등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동협의체 발족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2월 9일, 제1차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대면회의 대신,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이 첫 회의에서 향후 사무국장 원탁회의를 이끌 좌장(회장)으로 김성섭 서울 사무국장을 선임하였고 황문규 경남 사무국장을 간사로 선임하였다. 이후 매월 1회 대면 혹은 영상회의 방식을 통해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거나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위원회 간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사무국장 원탁회의



###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원탁회의의 회칙

조 항	주요내용	비 고
목적 및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자치경찰의 발전 도모</li> <li>•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간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li> <li>•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공동현안의 협의</li> <li>•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li> </ul>	제1조 제2조
운영진 및 운영진 선출(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장(회의주재), 간사(업무지원), 권역별* 대표</li> <li>*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대표</li> <li>• 좌장과 간사는 호선, 권역별 대표는 권역별 호선</li> <li>• 운영진 임기는 전·후반기 각 1년 6개월(연임불가)</li> </ul>	제3조 제4조 제5조
회의운영 및 회칙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 전체회의 매월(필요시 임시회의, 권역별 대표회의)</li> <li>• 누구나 회칙개정 발의 가능,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li> <li>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li> </ul>	제6조 제7조

##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명단

2023.6.30. 현재

지자체명	성명	주요약력	비고
서울특별시	김성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서울 중부경찰서장</li> <li>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li> </ul>	제1기 좌장
부산광역시	박노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동의과학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li> <li>前 부산 남부경찰서장</li> </ul>	
대구광역시	박동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現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li> <li>現 한국자치경찰학회 부회장</li> </ul>	
인천광역시	반병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인천경찰청 청문감사관</li> <li>前 인천 서부경찰서장</li> </ul>	
광주광역시	오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광주경찰청 생활안전과장</li> <li>前 광주 서부경찰서장</li> </ul>	
대전광역시	김익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li> <li>前 대전 중부경찰서장</li> </ul>	
울산광역시	유윤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울산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li> <li>前 울산경찰청 경무과장</li> </ul>	
세종특별자치시	임선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법무부 민간귀화 면접관</li> <li>前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전문위원</li> </ul>	
경기북부	정용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KOICA 자문관(인니경찰교육 자문)</li> <li>前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장</li> </ul>	
경기남부	김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li> <li>前 대구경찰청 차장</li> </ul>	
강원도	김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現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 홍보대사</li> <li>前 강원 강릉경찰서장</li> </ul>	
충청북도	한흥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li> <li>前 충북 옥천부군수</li> </ul>	

지자체명	성 명	주 요 약 력	비 고
충청남도	이 시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충남 공주경찰서장</li> <li>前 충남 부여경찰서장</li> </ul>	
전라북도	방 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전북 익산경찰서장</li> <li>前 전북 남원경찰서장</li> </ul>	
전라남도	백 혜 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li> <li>前 전남 곡성경찰서장</li> </ul>	
경상북도	서 진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경북경찰청 경무·수사과장</li> <li>前 경북 칠곡경찰서장</li> </ul>	
경상남도	황 문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現 중부대학교 교수</li> <li>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특위 자문위원</li> </ul>	
제주특별자치도	강 호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울산 울주경찰서장</li> <li>前 제주 제주동부경찰서장</li> </ul>	



# 부록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경기북부경찰청 조직 및 현황
4. 위원회가 걸어온 길

##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경찰법 )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02-3150-115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경찰청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⑨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경찰청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국·부 또는 과로 한다.

- ② 경찰청장·차장·국가수사본부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30.>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7조(사무기구)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④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시·도경찰청 차장) ① 시·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 ②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 ②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⑦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조정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  
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장 보칙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22. 11. 15.>

### 부칙 〈제19023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인 위원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의 상임화에 관한 경과조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상임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비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5-20 조례 제 7000호

(일부개정) 2022-10-31 조례 제 7482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등)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 ②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정하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절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 제5조(위원의 추천)

-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추천받은 사람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위원 중 2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각각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도지사 및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시 경찰사무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책임자가 경기남·북부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의요구)

-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도지사는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인 이상 또는 도지사는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의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

###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 ① 도지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을 경기남·북부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자치경찰사무의 감사)

- ①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경기도 감사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수당 등)

-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 위원회의 상임위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사무국의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예산)

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자문기구 설치 등)

-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자치경찰의 정책·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정책·제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행정적 지원 요청)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의견수렴 등 <개정 2022.10.31.>)

- ① 위원회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제안, 의견수렴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31.]

#### 제21조(자치경찰정책에 관한 연구 등)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및 자치경찰 선진화를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 부칙 <2021.5.2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기산일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별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별지별표)

### [별표 1]

##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3조제1항 관련)

###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④ 범죄예방 교육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④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② 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 단체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③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 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 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 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청소년· 노인·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 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신고현장 출동 및 출입·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격리, 인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⑦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일시보호조치에 대한 의뢰·지원 ⑧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⑤ 실종아동 보호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 (정책자문단 등) ⑥ 위기 청소년 및 소년범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간접)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신고현장 출동 및 출입·조사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⑥ 가정폭력범죄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⑥ 학교폭력범죄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③ 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구조를 위한 상담·보호기관과 상호 협력 ④ 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⑤ 성폭력 신고 현장출동, 출입·조사 등 조치 및 국가경찰 수사사무와 협력 ⑥ 성폭력범죄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④ 성매매 피해자 등 긴급구조를 위한 상담·보호기관과 상호 협력 ⑤ 성매매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연계 지원 ⑥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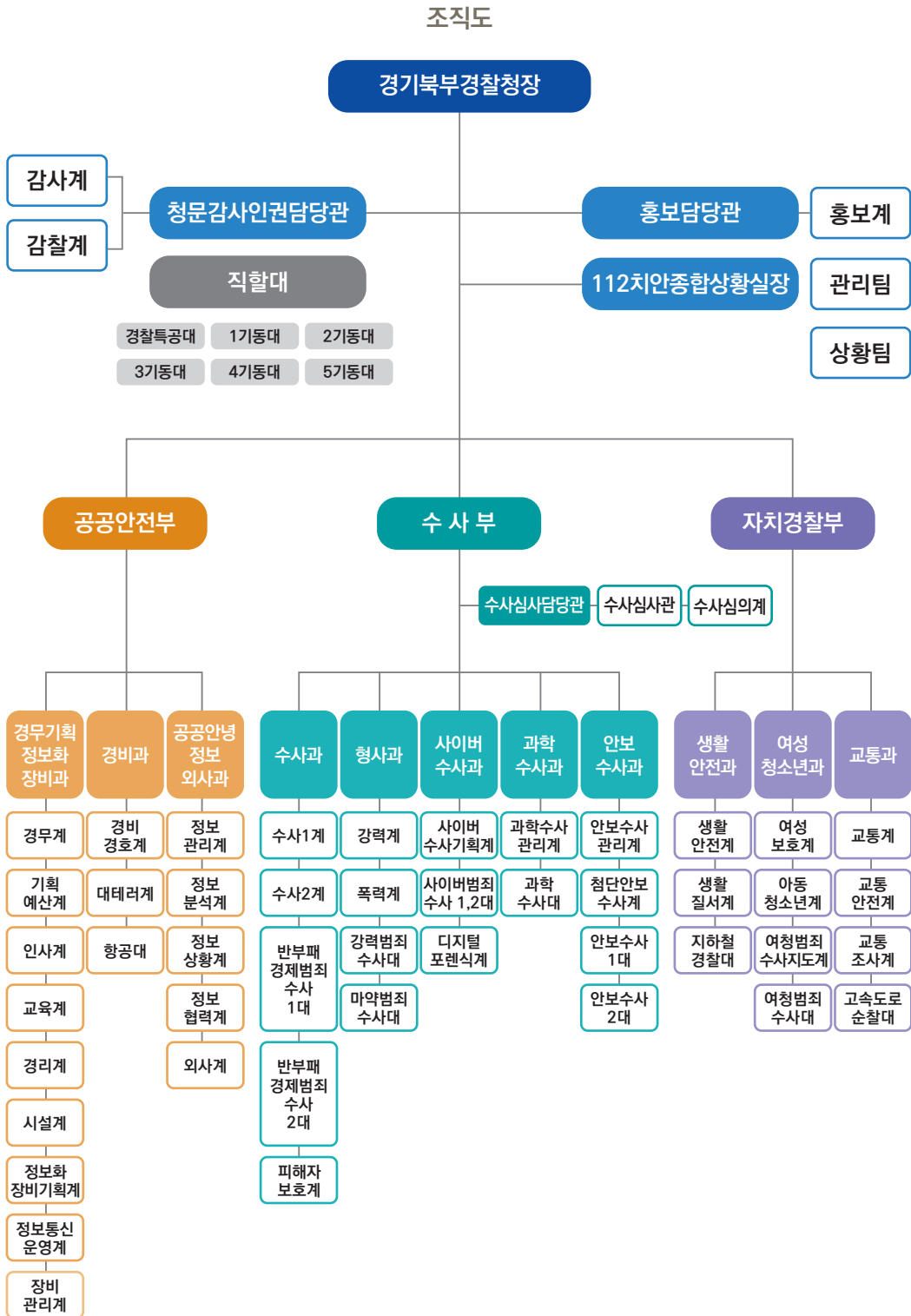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어린이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단,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및 동법 제53조의3 제1항, 제3항은 제외) ④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⑥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⑦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릿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③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③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관련 행정과 자치경찰사무 연계 필요 업무 협의 및 상호 협조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 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 (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 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 3. 경기북부경찰청 조직 및 현황



## 자치경찰 현황('23.6.30)

### • 경기북부 경찰인력 : 전체 7,068명(자치 994, 국가 6,074)

- 전체현원(자경위+도경찰청+경찰서) 7,068명 중 자치부서(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는 1,190명
  - 자치부서 현원 중 자치경찰은 994명, 국가경찰은 196명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8, 경기북부경찰청 104, 경찰서 882
- ※ 자치경찰비중 : 전체 대비 14%, 자치부서 대비 84% 차지



### • 관서/기능별 자치경찰 현황

구 분	자치부서 합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계	자치 경찰	국가 경찰	계	자치 경찰	국가 경찰	계	자치 경찰	국가 경찰	계	자치 경찰	국가 경찰
합계	1,190	994	196	175	138	37	406	390	16	601	458	143
자치경찰 위원회	8	8	-	-	-	-	-	-	-	-	-	-
경기도 북부경찰청	225	104	121	35	20	15	62	48	14	128	36	92
13개 경찰서	957	882	75	140	118	22	344	342	2	473	422	51

## 주요업무

생활안전 분야	범죄예방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CPTED, 여성안심귀갓길 등), 성매매·사행행위 지도 단속, 자살지도자 및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지도 등
여성청소년 분야	여성, 사회적 약자,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등) 정책 수립 및 시행, 아동·노인·청소년 등 학대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여성청소년 수사 기획 등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무, 교통안전기획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교통 지도단속 계획수립 및 단속관리, 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 등

## 경기북부경찰청 치안 수요 ('22. 12월 말 기준, 경기북부경찰청)

- 전국 5위권이며, 경찰관 1인당 인구는 경기남부에 이어 2위

구 분	주요 치안통계				관할인구(명)	경찰1인당 담당인구(명)
	총범죄(건)	5대범죄(건)	112신고(건)	교통사고(건)		
전국	1,435,756	450,623	19,117,453	1월 말경 확인	51,439,038	393
경기북부	87,693 (전국 5위)	24,552 (전국 6위)	1,146,451 (전국 5위)	12,744	3,547,519 (전국 3위)	529 (전국 2위)
점 유 율	6.1%	5.4%	6.0%	1월 말경 확인	6.9%	134.6%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 (1위) 경기남부청 553명 → (2위) 경기북부청 529명

## 경기북부경찰청 관할 구역 현황 ('22. 12월 말 기준, 경기북부경찰청)

번호	시군명	경찰서	면적(km <sup>2</sup> )	인구(명)
계	10개	13개	4,267.78	3,547,519
1	고양	고양	165.57	490,088
2		일산동부	59.94	296,122
3		일산서부	42.56	290,325
4	남양주	남양주남부	291.59	439,477
5		남양주북부	166.51	297,876
6	파주	파주	673.86	495,315
7	의정부	의정부	81.55	463,724
8	양주	양주	310.43	243,432
9	구리	구리	33.33	188,701
10	포천	포천	826.98	146,701
11	동두천	동두천	95.67	91,546
12	가평	가평	843.58	62,150
13	연천	연천	676.21	42,062

※ 면적 : 4,268km<sup>2</sup> (서울의 7배 / 전국의 4.3%, 경기도의 42%)

※ 인구 : 355만명 (전국의 6.9% / 경기도의 26.1%)

## 4. 위원회가 걸어온 길

2021년



▲ 사무국 직원 임용식('21.5)



▲ 출범식 및 위원 임명식('21.6)



▲ 출범식 및 위원 임명식('21.6)



▲ 제1회 회의('21.7)



▲ 코로나19 방역 합동 점검('21.7)



## 2021년



▲ 경기북부경찰청장 간담회('21.7)



▲ 도의원 간담회('21.8)



▲ 안전한 경기북부, 자치경찰이 함께합니다! 슬로건 시상('21.8)



▲ 승진 임용식('21.9)



2021년



▲ 현장방문('21.9)



▲ 제1회 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21.10)



▲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기념 컨퍼런스('21.10)



▲ 의정부시의회 방문('21.10)



▲ 의정부시장 면담('21.10)

## 2021년



▲ 위원회 제1호 표창 수여식('21.10)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캠페인('21.10)



▲ 남양주시 위기대응팀 격려('21.10)



▲ 제1회 실무협의회 개최('21.11)



▲ 역량강화 워크숍('21.11)



## 2021년



▲ 국가·자치경찰 합동 승진임용식('21.11)



▲ 찾아가는 자치사무 수범 경찰공무원 표창('21.11)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모니터링단 방문('21.11)



▲ 직원 생일 축하('21.12)



▲ 정책자문단 위촉식('21.12)



▲ 고충심사위원회 위촉식('21.12)

2022년



▲ 업무협의(경기북부경찰청, '22.1)



▲ 업무협의(도로교통공단 경기지역본부, '22.1)



▲ 현업부서 방문(동두천경찰서, 연천경찰서, '22.1)



▲ 승진임용식('22.2)



▲ 동두천시장 면담('22.2)

2022년



▲ 승진임용식('22.2)



▲ 구리시장 면담('22.3)



▲ 가평군수 면담('22.3)



▲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업무협약('22.3)



▲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구축 업무협약(구리시, 가평군, '22.4)



## 2022년



▲ 직원 생일 축하('22.4)



▲ 경기북부경찰청 직장협의회 간담회('22.5)



▲ 경기북부경찰청장 면담('22.6)



▲ 제1기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22.6)



▲ 제1기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22.6)



▲ 업무협약(도로교통공단, '22.7)

2022년



▲ 1주년 기념식('22.7)



▲ 파주시장 면담('22.8)



▲ 동두천시장 면담('22.9)



▲ 포천시장 면담('22.9)



▲ 구리시장 면담('22.10)

## 2022년



▲ 워크숍('22.10)



▲ 워크숍(행복마을관리소 방문, '22.10)



▲ 남양주시장 면담('22.11)



▲ 연천군수 면담('22.12.)



▲ 가평군수 면담('22.12)



▲ 양주시장 면담('22.12)

## 2023년



▲ 정책자문단 회의('23.1)



▲ SPO 소통 간담회('23.2)



▲ 자치경찰 대상 예산회계교육('23.3)



▲ 자치경찰 시군 설명회(의정부시, '23.4)



▲ 자치경찰 시군 설명회(구리시, '23.4)



▲ 자치경찰 청렴인권 교육('23.4)

## 2023년



▲ 직원 생일 축하('23.4)



▲ 자치경찰 힐링 교육('23.5)



▲ 청년 서포터즈 2기 발대식('23.4)



▲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23.4)



▲ 자치경찰 차량 지원('23.5)



▲ 자치경찰 시군 설명회(동두천시, '23.5)

2023년



▲ 위기대응팀 점검('23.5)



▲ 상반기 종합감사('23.5)



▲ 자치경찰 시군 설명회(동두천시, '23.5)



▲ 실무협의회('23.6)



▲ 지역대학 교류 업무협약('23.6)

## 우리동네 자치경찰

---

**발간인** 위원장 신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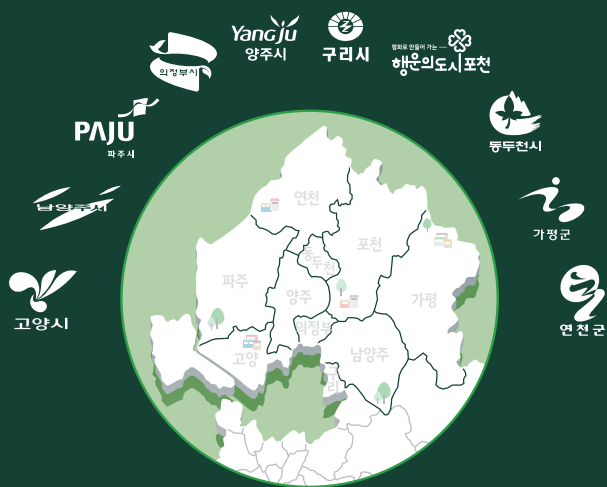
**발행일** 2023년 7월

**발행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https://www.gg.go.kr/mn/kssgpcmit/>)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4층

---

※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있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NORTHERN GYEONGGI-DO POLICE COMMISSION